

61호

2012년 1,2월호

독립정신 추경영신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1년 7월 21일

삼원포 신흥무관학교 터에서...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있게 한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청춘이 있었기에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있습니다.

조국 광복을 향한 그 외롭고 험난한 여정에 청춘을 바쳤던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큰 뜻에 마음이 절로 숙연해집니다.



| 시로 읽는 독립정신 |

그대들 돌아오시니

- 재외 혁명 동지에게 -

작자 : 정지용

백성과 나라가
이적(夷狄)에 팔리우고
국사(國祠)에 사신(邪神)이
오연(傲然)히 앉은 지
죽음보다 어두운
오호 삼십육 년!

발이랑 문희우고
극식 앓아가고
이바지하올 가음마저 없어
금의(錦衣)는커니와
전진(戰塵) 떨리지 않은
융의(戎衣) 그대로 뵈일밖에!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

허울 벗기우고
외오 돌아섰던
산(山)하! 이제 바로 돌아지라
자취 잃었던 물
옛 자리로 새소리 흘러이라
어제 하늘이 어너어니
새론 해가 오르라

사오나온 말굽에
일가친척 흠어지고
늪으신 아버지, 어린 오누이
낮서라 흠에 이름 없이 구르는 백골!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

상기불현듯 기다리는 마을마다
그대 어이 꽃을 밟으시리
가시덤불, 눈물로 헤치시라.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

해설_ 정지용(1903~?)

충북 옥천이 고향인 정지용 시인의 해방에 대한 감격과 더불어 풍찬노숙 이역만리에서 조국의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애국지사들의 귀환을 예찬하는 노래이다. 이 작품은 중앙문화협회가 편집하여 1945년 12월에 발간한 『해방기념시집』과 1946년 1월 『혁명』 창간호에 함께 실려있다.

혁명동지들의 귀환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고통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그대들 돌아오시니/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 라는 반복적인 시어를 통해 해방의 참의미를 성찰하고 있다.

시인께서 시를 쓴 지 어언 65년, 오늘 다시 읽어보니 '외오', '자취', '문화우고', '가음', '융의' 등 어어쁜 말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우리 말 한글이 해방되지 못한 것 같아 쓸쓸하다. 당시 민중이 소통했던 우리말 '외오'는 잘못되다, 그릇되다 등의 뜻이고 '자취'는 자리, '문화우고'는 무너지게 하다, '가음'은 어떤 일을 할 때 쓸 재료, '융의'는 수자리(병사) 서는 이들의 옷(군복)을 뜻하는 말이다.

시인의 저서로는 『정지용 시집』, 『백록담』, 『지용시선』 등이 있고 1950년 6·25 전란 중 입북시, 전선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어 알려져 있다.

■ 시 선정 : 홍일선 (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회장)



2012 1*2

통권 61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 04 권두언 _
나라의 주권을 내팽개친 한미 FTA
| 임재경



- 07 우리역사 바로잡기 _
'자유민주주의' 로의 용어개정은 옳지 않다!
| 이인재



- 15 우리고장의 독립운동 _
밀양의 항일 독립운동
| 손정태
- 28 특집 _
왜 '한일협정' 을 전면 재협상 하여야 하는가?
| 송철원
- 39 특별기고 _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 출범을 맞이하여
| 김학민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학노, 이일선, 김현모,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42 청년학생이 간다 _
 순국선열의 날,
 창무극 〈백범 김구〉 관람을 다녀와서
 | 정혜진

46 영화읽기 _
 〈레드헌트〉, 4·3 사건의 잊혀진 얼굴들
 | 이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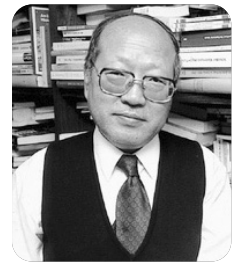
49 백년편지 _
 어머니 전상서
 | 김정록

54 임정서가 _
 송건호 평전
 6월 항쟁
 호남의병장 전해산
 | 편집부

60 독립정신 이모저모



나라의 주권을 내팽개친 한미 FTA



임재경
前 한겨레신문사 부사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지난 2011년 11월,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비준형식을 마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1905년 일본이 조선에 억제한 이른바 ‘을사보호조약’ 이후 한 세기동안 이루어진 여러 조약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주권 훼손이다. 아니 주권 포기 행위에 가깝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하나이고,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 그 다른 하나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그 2개를 모두 훼손했다. 누구나 아는 대로 대외적인 주권은 영토를 온존하게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지도상으로는 영토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주둔한 외국군에게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든가 외국상인들에게 조세상의 특별한 대우를 한다면 그것은 내용이 텅 빈 허울만의 주권국가일 뿐이다. 이를테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지휘권을 서둘러 회수한다는 방침을 참여정부가 결정한 것은 뒤늦게나마 영토의 실질과 관련

된 주권의 본뜻을 깨달은 결과였다. 하지만 기막힌 현실은 현 이명박 정부가 기왕에 잡아 놓은 저작권 회수시기를 뒤로 미루어 놓은 작태이다.

FTA 비준안을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공공연하게 짓밟은 것이며 이명박 정권은 곧 헌법 제1조 주권재민(主權在民) 조항을 헌신짝처럼 취급했다. 비준안의 강행처리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FTA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촛불 행렬은 나라의 주인이 스스로 나서서 주인의 권리(주권)를 행사겠다는 결의에 다름 아니다. FTA 협정문에 오역(誤譯)이 있었다니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주권자의 저항이 두려워 영어 협정문을 원의대로 읽는 것을 가능한 한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손질의 흔적이라 해야 맞는 이야기다. 국민이 “잘 모르고” FTA를 반대한다니 이 얼마나 가소로운 말장난인가. 처음부터 FTA와 관련된 전후 정보를 차단하고 일방적 홍보를 전개한 것이 정부-야당 일각을 포함한 국회,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보수 언론매체들이 아니었던가.

국가 간의 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나라와 겨레의 긍지 혹은 자존심이라는 추상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언동이야말로 짧은 생각의 소치이다. FTA가 경제 성장과 고용증대에 이바지 한다는 이른바 현실론이 그것인데 한 세기 전 을사보호조약 체결당시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 매국세력조차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입에 담았던 일이 기억에 생생하다. 일부 산업과 일부 대기업,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직종(외교-경제-안보분야의 직업 관료와 외국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변호사 등)은 단기적으로 FTA의 덕을 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익이 곧 국리민복은 아닐뿐더러 오히려 긴 안목의 국리민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천하 공지의 일이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불가피론의 경제부처 관변론자들은 앞으로 언젠가 유럽연합(EU)과의 FTA, 그리고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여 무역 실리(實利)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면 구태여 미국과의 FTA를 뒤로 미룰 까닭이 없다고 했다. 한미 FTA 불가피론자들의 되어먹지 않은 입론에 일일이 대거 리 하는 것 자체가 구차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무역실리 외연 확대론이 주권국



가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리는 되풀이하여 경고해야 한다. 멕시코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실리와는 거리가 먼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거니와 항차 한국은 멕시코와 달리 미국과 국경을 공유하는 인접국가도 아니다. 소련 붕괴이후 지구상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한 미국과 경제-군사 양면에서 미국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사이의 틈바구니에 낀 우리가 미국과 고분고분 균형을 잃은 조약을 맺는 것을 중국이 먼 산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리라 믿었다면 그것은 백치나 다름없다.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여 한미 FTA가 무역 실리 확대에 필요한 것이라면 왜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 필요를 발설하지 않는가. 일본과 FTA를 체결해보아야 기득권층에 실익이 없어서일까. 절대 아니다. FTA 만능론자들도 을사보호조약과 일제강점기 36년의 악몽을 국민의 뇌리에서 지우지 못한다. 국민의 시선이 소름 끼치고 중국의 반응이 꺼림칙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럴진대 하물며 재판의 주권을 포기하고 기간산업을 미국식 표준의 경쟁 시장에 내놓는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시선과 중국의 반응은 어떠할까. 나라 안은 이미 언급한대로 냉혹한 비판을 넘어 분노로 치달고 있는 반면, 이웃 중국의 반응은 아직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지 않다. 집권당의 FTA 비준 강행처리가 현 대한민국의 최대 정치쟁점이라는 것 때문인지 중국은 대외 공식 슬로건인 내정불간섭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꼴이다. 하지만 13억 인구 대륙의 저 침묵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중국정부의 “우리는 초청받은바 없다”는 볼멘 어조로 미루어 앞으로 나타날 반응이 어떨지는 짐작이 가고 남는 일이다. ‘진영논리의 게임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대미 굴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며 비웃음을 짓는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볼지도 모른다는 떨떠름한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만고의 진리 중의 하나로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거니와 나라 관계에서도 굴종을 일삼는 상대의 등은 다독겨려 줄 수는 있어도 결코 존중하지는 않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한미 FTA는 우리 근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굴종의 최신판에 해당한다. 미국과 중국의 각축을 주조로 하는 동아시아의 향후 질서에서 좋지 않은 선행으로 작용할 것만은 불을 보듯 뻔하다. 통상 협정을 주창하고 실무를 담당한 관료진은 향후 동아시아 외교에 미칠 영향은 자신들의 소임이 아니고 대통령의 몫이라고 발뺌을 하려들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긴 눈으로 지역의 평화와 진정한 의미의 국리민복을 바란다면, 날치기로 처리한 FTA 비준안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

‘자유민주주의’로의 용어개정은 옳지 않다!



이 인 재 | 한국역사연구회장/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1919년 대한민국 건국헌법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헌법 전문(前文)에서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고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서울에서 3·1 운동을 일으킨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고을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손 백성에 대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고 하였다. “神人一致로 中外協應하여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로 我子孫黎民에 世傳키 爲하여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임시정부는 국민의 신임으로 조직된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대한민국 건국헌법인 임시헌장을 만들었는데, 헌법정신은 평화적 독립과 자주독립이라는 것이었다.

임시헌장 3조부터 6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한민국 국민, 즉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없이 일체 평등하고(3조),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저작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서(信書)의 자유, 주소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소유의 자유를 향유하며(4조),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5조), 「교육, 납세, 병역의 의무가 있다(6조)」고 하였다.

대의정치와 법치주의에 대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을 통치한다(제2조)」고 하였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1조)」라고 하여 전근대 왕조국가시대의 군주 주권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명실상부한 국민 주권국가임을 세계만방에 알리었다. 이러한 국민 주권국가로서 「인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7조)」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헌법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월 안에 국회를 소집한다(10조)」는 조항이 있다.

요컨대 현대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임시정부의 건국헌법은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핵심으로 한 국민의 인권을 바탕으로 하여 대의정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자주독립을 하되 평화적으로 하고, 인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겠다는 것을 헌법정신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대한제국의 종말을 겪은 지 근 10년 만에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이러한 현대 헌법의 대강(大綱)을 세운 것은 세계 인류 역사에서도 특기할 만한 경이로운 일이었다.

역대헌법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1919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자유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 이후 1987년 헌법까지 소유의 자유를 제외한 여타 자유 조항은 일관되게 수용되었다. 가령 1948년 제헌헌법 5조에서는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건국헌법의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의 자유는 역대 헌법 본문에 면면히 계승되어 있다.

헌법에 나오는 자유의 영문 표현은 모두 freedom이다. 1987년 헌법 전문(前文)에 나오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자유와 권리는 ‘freedoms and rights’ 이고, 본문 8조 ‘정당 설립의 자유’ 역시 ‘free’ 이다.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이전의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69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119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등에 나오는 자유 모두 freedom이다.

혹자는 1972년 유신헌법부터 나오기 시작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1987년 헌법의 영문판에 나오는 전문(前文)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이고, 본문 4조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변경 내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현행 집필기준	새 집필기준
<p>독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 서술 시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유신체제가 무너진 뒤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국민의 노력이 있었으나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 정부를 세웠음을 기술한다. 이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하여 1인 장기 집권체제가 성립되었음을 다룬다. 	<p>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잠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p>
<p>친일파 청산</p> <p>대한민국은 이후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p>	<p>삭제</p>
<p>유엔의 대한민국 승인</p> <p>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유엔에 의해 합법정부로 승인되었음을 강조한다.</p>	<p>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p>



◀ 지난 2011년 11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확정하였다. 집필기준을 살펴보면 그동안 주요 논쟁을 벌여왔던 중학교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과 병행하며, '독재'는 '독재화'로 대체해 표현했다. 한편 역사학계에서 주장해온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결국 배제됐다.

“The Republic of Korea shall seek unification and shall formulate and carry out a policy of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의 여러 원칙들(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인 것이다.

1972년 유신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는 유신헌법의 잔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1960년 4월 혁명의 유산이다. 4월 혁명 헌법에 처음 나오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것이다. 1960년 헌법 13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고 되어 있다. 진보당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탄압을 경험하고 난 후 만든 이 조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헌법 개정시 헌법개정안 기초위원장이었던 정헌주는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사회질서와 정치질서’라고 분명히 설명한바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21조 2항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지하려는 정당은 당

연히 위헌일 것”이라고 한 경우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이다. 이 경우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추가 설명인 것이다.

제헌헌법의 경제적 자유와 5·16 쿠데타헌법의 왜곡 : 1919년 건국헌법에서는 소유의 자유를 천명하였다. 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48년 제헌헌법 84조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설명하였다. 국민 개개인의 소유의 자유 즉 경제적 자유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국민경제 발전의 한계 내에서만 자유롭다는 것이었다. 헌법 전문의 균등사회론 실천을 위한 세부 내용인 것이었다.

이러한 국민경제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상관성이 바뀐 것은 바로 1962년 5·16 쿠데타헌법 제111조이다. 즉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고 바꾼 것이다.

5·16 쿠데타헌법이 제헌헌법의 경제 조항을 바꾸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는 1980년 5·17 쿠데타헌법의 120조에 잘 드러나 있다. 즉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③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라고 하여 독과점의 폐단으로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헌법이 바로 1987년 6월항쟁헌법이다. 이 헌법 119조에서는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었다.

역대 교육과정에서의 민주주의 : 대한민국 역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는, “① 민주주의란 자유를 뜻한다. ② 민주주의란 스스로 다스림을 뜻한다. ③ 민주주의란 의견이 서로 다를 것을 뜻한다. ④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준다. ⑤ 민주주의란 인내를 뜻한다(문교부령 제44호:1955. 8. 1 제정공포, 국민학교 교육과정, 육학년, 五. 민주주의).”고 정의해 왔듯이, 역대 교육과정에서 자유와 평등 등의 개념은 민주주의의 내포 개념이었다.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와 평등 등으로 구성된 근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형식적 자유에서 실질적 자유로,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발전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관용어구로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1년 역사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는 역사교육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로서의 자유민주주의라고는 그 의미가 달랐다. 우선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은 민주주의의 후행 형태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의 후행 형태가 자유민주주의라면, 당연히 역대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정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설명은 들은 바 없다.

한편 한국현대사학회는 인민민주주의를 배제한 모든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가령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동일하다는 것인데, 근현대 세계 인류사가 민주주의를 놓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어떻게 혼합하느냐를 두고 발전해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그 개념 규정의 애매함은 어찌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정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역대 정당의 자유민주주의 : 1962년 헌법의 경제조항은 정당의 정강을 헌법에 반영시킨 첫 번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주의’는 1961년 12월 7일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혁명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선언하고, 1963년 2월 26일 제정된 공화당 강령 1조에서,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며,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확립을 기한다.」는 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그 이전 1950년대 양대 정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의 정강 1조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확립(자유당)», 「일체의 독재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한다(민주당)」로만 되어 있었다.

현재 한나라당의 당헌을 보면 총칙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와 민족자주” 등을 당헌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정당의 당헌에 들어가는 용어이다. 50년대 자유당과 민주당의 당헌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특정 정당의 당헌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역사교과서 한국 현대사 핵심어가 된다면, 또 다른 정당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역사교과서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로의 수정과 독재정권 서술의 약화 : 근현대 세계 인류의 희생과 기여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자유는 매우 소중한 유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계와 역사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유민주주의로의 수정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독재정치 서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한 드러나지 않은 의도는 중학역사 집필기준 시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10월 17일 발표한 중학역사 집필기준 시안 어디에도 독재정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었다. 우선 총론에서 현행 교육과정에 있던 “(4) 대한민국의 발전 ②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변화과정과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파악한다.”가 개정교육과정에는 “(3) 대한민국의 발전 ② 4·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경제성장, 대중문화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확대를 설명한다.”고 수정되어 있었다. 1950년대가 1960년대로 바뀌고, 정치변화과정 즉 독재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이 사라진 대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각론에서 독재대신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를 삽입하는데 그쳤다.

이를 2010년 중학교 역사교육과정 해설서 해당 부분과 비교하면 명확해진다. 현행 교육과정의 “②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변화과정과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파악한다.”에 대한 해설을 보면, “이승만 정부의 장기 독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4·19혁명에 의해 무너졌다. 그러나 이후 성립된 장면 정부는 오래가지 못하고,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되었다.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내걸고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정치적으로 독재체제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학생, 지식인, 종교계, 야당 등은 연계하여 박정희 정부에 저항하였다. 이후 1980년 신군부 정권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중략) 역대 정부별로 나누어 정부 정책의 방향과 성과, 문제점 등을 민주화의 진통과 진전으로 이해하는 데 유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점을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총론에서는 “3.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시련 - 4·19혁명은 장기 집권을 위한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부정 선거 등에 맞서 일어났음을 설명하고, 그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 한계를 서술한다.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 서술 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4·19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 군사 정부를 세웠음을 기술한다. 이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하여 1인 장기 집권 체제가 성립되었음을 다룬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독재 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면서, 그 배경에 대하여 함께 설명한다. 유신 체제가 무너진 뒤,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국민의 노력이 있었으나,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군사 정부의 성립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음을 서술한다. 4.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다루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한 새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서술한다. 이후 독재 정치 아래서 억압되었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신장되었음을 유의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음을 서술한다.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수준으로 제시하고 평가는 유보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에 독재와 민주화를 명확히 서술하였으나, 2010년에는 교육과정의 하위 기준인 집필기준 없이 해설서에만 독재와 민주화를 언급하였다가, 2011년 교육과정에서는 독재와 민주화를 언급하지도 않고, 2011년 집필기준 시안에도 서술하지 않다가, 공청회에서 문제가 되자, ‘독재화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시련’으로 삽입하였다가, 독재정치의 규정을 애매하게 할 요량으로, “5·16 쿠데타로 집권할 당시만 해도 독재를 하지 않으려 하다가, 장기집권을 하다 보니 독재가 되었다”는 식으로 곡학(曲學)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더 심각하여, 교육과정, 집필기준에 없고, 검정기준에 몇 줄 삽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곡학은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1987년 6월 항쟁이후 언론지상에 산업화세력, 민주화세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유신 독재세력이 민주화 운동을 억압한 과는 있지만, 산업화에는 공을 세웠다는 이른바 공과론을 거론한 일이 있다. 그보다 40년 전인 1945년 해방 공간에서 친일세력이 친일은 과실이지만 산업화에는 기여하였다는 주장이 연상되었다. 이러한 공과론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친일세력, 친독재 세

력이 근대화 가운데 산업화에 기여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25년이 지나 본인들이 산업화세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되자, 이제 민주화의 성과까지 쟁취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요컨대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한 것은 학문적, 교육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독재를 삭제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에서 사용한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역사교과서 현대사 단원의 핵심어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

밀양의 항일 독립운동



손 정 태
밀양독립운동사연구소장

당파싸움으로 해지는 줄 몰랐던 양반중심의 봉건지배 체제에다 대원군의 쇄국정책까지 더하여 근대화로의 국면전환이 용이하지 못했던 20세기 초의 우리나라에서 1905년 11월 17일 제국주의 일본의 무력 앞에 무릎을 꿇는 을사늑약이 맺어지더니, 국모가 시해당하는 참변이 발생하고 1910년 8월 29일에는 강압적인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우리의 국권마저 유린당하고 말았다.

선각자들의 북간도 망명

1910년을 전후로 수많은 밀양사람들이 조상대대로 지켜왔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고향을 떠나 만주로 향했다. 그것이 일제의 간섭과 수탈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였기도 했고, 같은 이유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도 만주는 희망의 땅이었다.

만주로 이주해 간 사람들 가운데 선각자들은 환인·연길·길림 등을 중심으로 종교시설과 학

교를 세워 한인촌을 개척해 나갔는데, 밀양출신의 독립운동가 단애(檀崖) 윤세복(尹世復) 선생도 그중의 한 사람으로 형님인 윤세용(尹世鏞)선생과 함께 밀양 북북면 무연리(연포마을 318번지)에 있던 가산을 전부 정리하여 1911년도에 서간도 환인으로 이주해서 교육기관인 동창학교를 세우고 또한 대중교를 통하여 독립운동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일찍이 단애 선생은 이승만(李承晩), 안창호(安昌浩), 이시영(李始榮),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 안희재(安熙濟), 김동삼(金東三), 이동녕(李東寧) 선생을 비롯하여 밀양출신 백민 황상규(白民 黃尙奎), 회당 손일민(晦堂 孫逸民) 선생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서라고 할 수 있는 대한독립선언서(일명 무오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9인 중의 한 분으로 서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를 통해서 흥업단과 북로군정서의 창립에도 가담하였고, 독립투쟁사에서 기념비적 전투인 홍범도(洪範圖)장군과 김좌진(金佐鎭)장군의 청산리전투(靑山里戰鬪)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다.

나중에는 홍암 나철 선생과 무원 김교현 선생에 이어 대중교 제3대 교주가 되었는데 대중교에 귀의한 이후 평생동안 사재를 가져 본 일이 없이 교당내에서만 기거하였으며 무장독립운동이 전개되는 현장에서는 한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다. 대한독립군단과 대한독립군정서를 주축으로 한 항일 독립운동단체들과 국내에 있던 일부 단체를 통합하여 효과적인 항일투쟁 기구인 신민부(총사령관:김좌진)를 결성할 때에도 이를 주도하였고 밀양인 손호(孫誥), 김홍규(金弘圭), 윤창선(尹昌善), 손봉현(孫鳳鉉) 등을 지도하여 신민부 군자금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대중교의 깃발인 <천기(天旗)>를 새로 제정하였고 교적의 간행에도 힘써 대중교의 규범인 <홍범규재(弘範規載)>, <삼일신고(三一神告)>, <신단실기(神壇實記)>, <종례총략(宗禮總略)>, <종문지남(宗問指南)> 등을 간행했다. 임오교변을 당하여 목단강 액하형무소(牧丹江 掖河刑務所 제1솥 獨3房)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감옥에서의 감상을 시조체로 적은 <복당서정(福堂抒情)>을 저술하였고 <삼일신고>를 한글로 번역하여 주해를 달았으며 대중교 수행지침서인 <삼법회통(三法會通)>을 저술하는 등 커다란 환란 가운데에서도 대중교의 교리를 집대성하였다.

이극로(李克魯), 김두봉(金斗奉), 이병기(李秉岐), 이희승(李熙昇), 최현배(崔鉉培) 등을 대중

교인으로 귀의케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중교 경전의 한글 번역과 한글연구에 공헌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대중교의 주력인사인 이시영, 이범석(李範奭), 안호상(安浩相), 정인보(鄭寅普), 명세제(明世濟), 신성모(申性模) 등이 해방 후 정부수립시 각료로 입각하고 서상일을 비롯한 10여 명의 교인들이 제헌국회로 진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단애 선생의 지도가 컸던 것이다. 단애 선생의 사람을 끌어 들이는 감화력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학계나 정계에서도 커다란 존경을 받았는데 신규식(申奎植), 김동삼, 박은식, 신채호 등은 선생을 일컬어 “한국 유일의 대정치가”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특히 前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박영석(朴永錫) 교수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물을 한 명 발굴했는데 그가 바로 윤세복 선생이다. 독립투사중에 안중근 의사 같이 생명을 초개와 같이 던진 의·열사는 많지만 독립, 종교, 교육의 삼위일체로써 헌신하시면서 민족의 대계를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한 사람은 윤세복 선생뿐일 것이다”라고 선생을 평가하고 있다.

영남 최초의 3.13 밀양만세운동

일제강점기하 밀양은 영남지역 최초로 3.13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된 곳이며 단애 윤세복 선생을 비롯해서 중국의 장개석(蔣介石)이 백범 김구(白凡 金九)선생과 동등한 위치에서 예우했던 위대한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若山 金元鳳) 장군과 중국 당국이 인정하는 최고의 항일투쟁가들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배출한 의기가 살아있었던 고장이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만 해도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의 빛나는 행적이 안타깝게도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하 1919년 봄 국내사정을 살펴보면 고종황제가 붕어(崩御)하였다는 비보가 전국팔도에 전해지고, 3월 3일 인산(因山:임금의 장례식)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전국에 알려지자 밀양의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청년들이 고종의 인산에 참여하기 위하여 속속 상경(上京) 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윤치형(尹致衡)과 윤세주(尹世胄)가 끼어 있었다.

인산을 기다리고 있던 중 3월 1일 정오 파고다공원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나자 이곳에 참여하여 격양된 군중 속에서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3일에는 인산 대열을 따르며 망국의 한에 뜨거운 눈물을 뿌리기도 했다.

파고다공원 현장에서 「독립선언서」를 획득하여 밀양으로 돌아온 윤치형과 윤세주는 먼저 동화학교(同和學校) 교장을 지낸 전홍표(全鴻杓) 선생을 찾아가 서울에서 있었던 만세시위 상황을 설명드리고 한마을에 살며 대개 친구나 선후배기간이었던 김병환(金炳煥), 최수봉(崔壽鳳), 이장수(李長守), 정동찬(丁銅贊), 박만수(朴萬守), 설만진(薛萬振), 윤보은(尹保殷), 권재호(權在浩), 정동준(丁銅俊), 박소중(朴小宗), 김소지(金小池), 최종관(崔鍾寬), 김상득(金相得), 박작지(朴作之), 엄청득(嚴淸得), 노재석(盧在石), 김상이(金相伊), 윤방우(尹芳友), 양쾌술(梁快述) 등과 밀양장로교회 여신도였던 이복수(고인덕의 부인), 김악이(황상규의 부인), 김영수(안영의 조모) 등을 규합하여 밀양에서도 독립만세시위를 할 것을 의논하고 밀양장로교회와 부근인 해천(海川)가에 있던 윤세주의 집을 거점으로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

전홍표 선생의 지도를 받은 밀양의 청년들은 당시 밀양면사무소와 부북면사무소의 등사판을 밤에 몰래 훔쳐내어 현 밀양여고 뒤편 아북산(阿北山)으로 올라가 병풍을 둘러 불빛을 가리고 독립선언서를 밤새워가며 수천매 등사를 하고 부인네들은 2~3일간 몰래 숨어 태극기를 수백매 만들어 윤세주의 집에 숨겨두고 3월 13일(음력 2월 12일) 밀양장날 독립만세시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인근 부락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연락을 취하였다.

당일 12시경부터 윤세주를 비롯한 여러 동지들이 각기 준비된 물품을 품속에 숨기고 밀양공립보통학교(현 내일동사무소 부근) 앞 밀양장터에 모인 천여 명의 군중들 속으로 파고 들어 오후 1시 30분경 '조선독립만세' 라고 크게 쓴 기를 군중들 속에 펼쳐 세우고 윤세주가 높은 곳으로 올라서서 「독립선언서」를 읽어 나가는 동안 동지들은 독립선언서와 준비해둔 독립신문 등을 재빨리 군중 속에 골고루 뿌리고 손에손에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다.

윤세주가 독립선언서 낭독을 마치고 두 손에 태극기를 움켜쥐고 '조선독립만세' 를 외치자 중간중간에 끼어있던 동지들을 위시하여 수천의 군중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조선독립만세를 함께 외치니 밀양공립보통학교 앞 장터는 삼시간에 만세소리로 떠나갈 것만 같았다.

만세를 부르는 군중들은 열광하여 앞장선 큰깃발을 따라 거리를 누비며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는데 밀양 거리는 온통 만세군중의 시위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밀양에 주재하고 있던 10여 명의 헌병과 경찰병력이 착검한 총을 휘두르며 군중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중과부적이었으므로 이들의 힘만으로는 막아내지 못하고 마침내 부산 일본헌병수비대 병력의 급파를 요청하여 가까스로 시위군중을 진압하기에 이르렀다.

한번 타올랐던 만세함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익일에도 밀양공립보통학교 학생 160여 명의 만세시위가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이어졌는데, 군경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 결국 시위대는 해산되고 만세시위 주모자의 검거가 악랄하게 진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고 재판에 회부 되었는데 피검된자 가운데 김병환(6월:내이동), 이장수(6월:내이동), 정동찬(6월:내이동), 박만수(6월:내이동), 설만진(6월:내이동), 권재호(4월:내이동), 정동준(4월:내이동), 박소중(6월:내이동), 김소지(6월:내이동), 최중관(6월:내이동), 김상득(3월:내이동), 박작지(3월:내이동), 엄청득(3월:내이동), 노재석(3월:내이동), 김상이(훈방:내이동), 윤방우(3월:내이동), 양쾌술(3월:내이동) 등이 옥고를 치루었고, 전홍표 선생과 여성기독교인들은 동지들의 함구로 검거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전홍표 선생과 윤치형, 윤세주는 중국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고 동년 4월 14일에 열린 권석재판에서 윤세주와 윤치형은 각각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경남지방에서는 최초(창녕군 영산면과 같은날)가 되는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일본경찰의 검거를 피해 중국으로 탈출한 윤세주와 윤치형은 남경의 덕화학당으로 유학왔다가 조국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 소식에 고무되어 서간도로 옮겨와 있던 김원봉과 만나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일을 해야할 것인가에 관해서 숙의를 거듭해 오던 한편 김원봉은 속속 국경을 넘어 오는 고향친구들인 한봉근(韓鳳根), 한봉인(韓鳳仁), 김상윤(金相潤) 등과 함께 이시영, 이회영(李會榮) 형제가 통화현(通化縣) 고산자(高山子)에서 조선청년들에게 신식교육을 시키고 있던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에 입교하여 군사교육을 받는다.

의열단의 창단과 밀양폭탄사건

신흥무관학교에서 단기 군사교육을 마친 김원봉과 그의 친구들은 1919년 11월 10일 밤, 길림시 교외 파호문 밖 평화로 57번지에 있던 중국인 반씨(潘氏) 농가에서 약산 김원봉을 의백(團長)으로 추대하고 밀양사람 5명(김원봉, 김상운, 한봉근, 한봉인, 윤세주)을 비롯하여 신흥무관학교 출신 동지들을 중심으로 모두 13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구축왜노', '구축왜노', '광복조국', '타파계급', '평균지권' 등 4개항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아 <의열단(義烈團)>을 창단하게 되었는데, 이를 시작으로 밀양출신 청년들의 불 같은 애국심은 우리나라 독립투쟁사를 통하여 <의열투쟁(義烈鬪爭)>이라는 역사적인 자취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의열단 1차 의거인 <밀양폭탄의거(密陽爆彈義舉)>에 참여했던 황상규를 비롯한 윤세주, 윤치형, 김병환 등등이 1920년 6월 16일 일경에 체포되어 3.13밀양만세운동을 주도한 죄까지 합쳐 6년 7개월여의 징역살이를 하였고, 이어 1920년 12월 27일 최수봉이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지만 실패하는 바람에 붙잡혀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밀양기독교 청년회 강연에서 "안락(安樂)의 본(本)은 고초(苦楚)에 있다"는 조선독립을 고취하는 연설을 한 것이 화근이 되어 1년 6개월의 형을 살고 병보석으로 출옥한 고인덕(高仁德) 선생은 이종암(李鍾岩)의 '경북폭탄의거(慶北爆彈義舉)'에 또 연루되어 재수감중 옥중에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밀양군청 이전반대 운동과 국농소 소작쟁의

1920년대 초반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했던 밀양인들의 대부분은 피체되어 옥고를 치루거나 중국 등지로 망명의 길을 떠나버렸고, 그나마 국내에서 일부 활동하던 사람들도 일제의 강력해진 탄압과 회유정책에 의해 운신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어 들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가장 의미있고 대규모로 전개된 운동가운데 하나는 '밀양군청 이전반대 운동(密陽郡廳移轉反對運動)'과 '국농소 소작쟁의(國農所小作爭議)'라고 할 수 있다.



▲ 밀양 출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약산 김원봉과 석정 윤세주(좌측부터)

먼저 밀양군청 이전반대 운동은 1927년 5월부터 시작되어 그해 말에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후에도 사안에 따라 2년여 동안 계속되었는데, 여기에는 가곡동의 밀양역전 부근땅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 대지주 쇼카도(松花堂太郎)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카나모리(金森 某) 등이 군청 이전시 그들에게 떨어질 차익을 탐하여 부지를 기부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는 “밀양군의 장래를 보아 군청을 가곡동 밀양역전 부근으로 이전하자”고 무모하게 선동하고 관계당국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발단이 된 것이다.

군청이전 소식을 접한 밀양군민들이 결사적으로 항거한 결과로 절충안인 ‘삼문동으로의 이전’이 수용되게 되었고, 1929년 8월 22일 경상남도 지방과에서 “밀양읍 내일동 376번지(현 밀양관아 자리)에 있던 밀양군청을 남천강 건너 삼문리 재판소 건너편 관유지 223번지의 6 및 184번지의 8(현 밀양시립도서관 자리)로 이전 신축한다”고 발표함으로써, 2년여 기간동안 10여 차례에 걸친 격렬한 군민대회와 수 십회의 진정서 제출이 있었던 이 문제는 일단락 되었는데, 그해 9월 2일 밀양군청 청사 기공식이 거행되었고, 12월 23일에는 신축 삼문동청사로 이전이 완료되었다.

밀양군청이전반대운동은 일제하에서 대부분의 밀양인이 참여하여 일제당국에 대항했던 군민 권익옹호운동이었으며, 아울러 일본인 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기득권층에 대항하는 민족 운동으로서의 성격도 지닌 것이라 하겠다.

또한 1927년에 발생한 ‘국농소 소작쟁의’는 일제의 잘못된 토지와 농업에 관한 정책으로 조 선농민들이 항상 고율의 소작료에 시달릴 뿐만아니라 그나마도 소작지를 얻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작권을 둘러싼 분쟁을 말한다. 일찍이 밀양 하남 국농소 지역은 척박한 토질과 잦은 풍수해로 인하여 소작료가 제때 납부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작료 미납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이유로 지 주인 민병석(閔丙奭), 서철규(徐喆奎) 등과 사음(舍音)인 이덕(李德), 신현옥(申鉉玉), 탁임조(卓任朝) 등이 불문곡직하고, 소작권을 새로운 소작인 412명에게 넘겨주자 구 소작인들은 갑자기 생계가 막연해져서 많은 불만이 표출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신·구 소작인들 사이에 갈등이 고 조되고 지주와 사음 등에 대하여 농민들의 울분이 폭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국농소 분쟁은 당시의 노동·농민운동의 전국적인 지도기관이었던 조선노동총동맹이 관여하여 원만히 해결 되었다.

밀양의 청년운동과 신간회 활동

다시 1927년 2월 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출감하여 밀양으로 돌아온 윤세주는 밀양청년회와 밀양청년동맹 및 신간회(新幹會)활동 등 청년운동을 전개하였고, 중외일보 기자와 경남주식회 사 사장 등을 역임하다가 1929년 3월 중국으로 다시 건너가 남경에서 김원봉과 재회하였고, 역시 같은 시기에 출옥하여 신간회 밀양지회장과 중앙집행위원회 서무부장 및 중앙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황상규는 1932년 5월 16일 신간회 2차 대회에서 신간회 해소가 결정된 뒤 4개월 뒤인 9월 2일 신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는 밀양지역 민족해방운동과 신간회 지회를 이끌어 오면서 항상 “나는 죽어도 집에서는 죽 지 않고 대중을 위하여 밖에서 일하다가 밖에서 죽겠다”고 다짐을 하곤 했는데,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신간회 해소라는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신병을 얻어 자택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황상규의 장례식은 신간회 밀양지회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안병희를 장례위원장으로 선정하여 사회장으로 집행되었는데,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국내외에서 운집한 조문객의 수가 10만 명이 넘는 정도의 엄청난 행사로 치루어 졌다고 한다.

당시 인파에 놀란 일제는 경남도경의 병력만으로는 어렵도 없어서 경북, 충북, 충남, 경기도 경의 지원까지 받아서 감시할 정도였다고 하니 이날의 장례식이 또 다른 민족운동을 촉발할까 봐 일제로서는 매우 두려웠을 것이고, 이날의 장례식이 얼마나 커다란 사건이었던지는 짐작이 갈만하다.

특히 구름처럼 모여든 군중의 숫자에 당황한 왜경은 장의위원장과 상주까지 검거하고 영정사진, 비문, 조기, 영결문, 만장, 명정 등을 전부 압수해 버리는 무리수를 두다가 수만 군중이 장의 시위로 조악을 울리며 경찰서를 포위하자 창피를 무릅쓰고 하는 수 없이 장례를 치르는데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와 민족혁명당

10년 만인 1929년 3월 재차 중국으로 망명해온 윤세주는 김원봉의 지령을 받고 심양과 천진 그리고 북경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었는데, 1931년에는 의열단이 남경으로 이동하여 군사간부학교를 설립할 즈음에는 이 학교 입교생 모집에 동분서주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같은 중의일보 기자 출신으로 안면이 있던 이육사(李陸史:본명,李活)가 중국에 나와 있음을 알고 그와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1932년 10월 20일 남경에서 김원봉과 함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를 개교하면서 이육사와 함께 자신도 스스로 제1기 교육생으로 입교하여 전문적인 군사지식을 습득하는 등 의열단의 노선이 의열투쟁에서 무장투쟁으로 대일 투쟁방식의 변화를 피하기 시작하였다.

이 학교의 명칭을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 제6대라고 불렀는데, 이처럼 정식명칭을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소속 훈련대로 쓰게된 이유는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황포군관학교의 정식명칭인

‘국민혁명군중앙군사정치학교(國民革命軍中央軍事政治學校)’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1기생에 관하여 살펴보면:

- ◆ 교육기간 : 1932년 10월 20일부터 1933년 4월 20일까지
- ◆ 교육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오전 : 학과교육, 오후:야외훈련,저녁 : 중국어 교육)
- ◆ 훈련장소 : 남경교외 탕산(湯山) 동쪽의 선수암(善壽庵)
- ◆ 대장 : 신익 구대장 : 노을용, 이검운
- ◆ 교육내용은 정치·군사 실습부분(정보, 첩보, 파괴, 선동 등 특수공작을 수행할 수 있는 요령)
- ◆ 교과목과 담당교관 및 교육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관 및 담당과목		
	과 목	교 관
정치부분	철학	김원봉
	정치학	한일래
	경제학	왕현지 김정우
	사회학	신 익
군사부분	진중요무령 폭탄제조법 측 도	신 익
	사격교범	김 종
	축성	김 준
실습부분	기관총조법 폭탄이용법 실탄사격	신 익
	부대교련	신 익
		이동화 노을용

제 1 기 생 (26명) 명 단		
연번	본 명	별명 · 이명
1	안병철	서하중
2	김영배	왕 권
3	이남해	이무용
4	문길환	호 영
5	윤익균	호 평
6	이원록	이 활 · 이육사
7	노석정	왕진명 · 강철사
8	신세철	조 열 · 신세명
9	이환순	장진산 · 신 민
10	김천만	진 암 · 강문홍
11	신병환	유 호 · 유형일
12	김지광	이자중 · 김세옥
13	김공신	왕덕해 · 이상구
14	지태선	진우삼 · 진혁수
15	박준빈	한소평
16	장수정	장주정

제 1 기 생 (26명) 명 단		
연번	본 명	별명 · 이명
17	유복산	
18	김수길	진량성 · 곽장영
19	이창하	진유일 · 이명원
20	이 원	
21	윤세주	석 정
22	김대륙	양민산 · 양진곤
23	김영제	김세일 · 김세광
24	정일명	황육수 · 정팔선
25	최장학	진하명
26	노철용	최성장 · 이덕무
	이상	26명

1932년 10월 20일부터 1935년 9월까지 3년여 기간동안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운영하여 제1기 26명, 제2기 55명, 제3기 44명 등 총 125명의 사관요원을 양성, 특수공작임무를 부여하여 국내로 파견하였으나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검거되고 말았다.

조선의용대의 활약과 광복군 참여

1936년 1월 20일 약산과 석정은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을 창당하고 각각 서기국 서기장과 중앙집행위원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였고, 1938년 10월 10일에는 한구(漢口)에서 총대장을 약산 김원봉이 맡고, 석정(石正) 윤세주(尹世胄)가 정치조장을 맡아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창설하였다.

일본의 재침으로 한구가 함락될 때 끝까지 한구를 지키던 조선의용대는 10월 23일 한구를 떠나 계림으로 이동하였다가 이후 중국의 각전구에서 2년여 동안 국민당정부군과 함께 작전중내부에 포진하고 있던 최창익을 비롯한 60%에 달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과 국내로의 진군이 목적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1940년 11월 4일 화북지방으로 이동할 것을 결정하였고, 1941년 1월 1일 조천문나루를 출발한 병력은 7월에 이르러야 하북성 태항산맥안에 있는 마전·동육지역으로 이동하여 팔로군전선 총지휘부에 예속되었다.

팔로군 제18전방총사령부 경위부대 역할을 담당하며 작전에 참여했던 조선의용대는 1941년 12월 12일 벌어진 호가장 전투(왕현순(王現淳), 박철동(朴喆東), 손일봉(孫一峰), 한청도(韓淸道) 등 네 명이 전사하고, 김학철(金學鐵)이 부상당하여 일본군에 의해 체포, 나가사키로 이송되어 감옥살이를 하고 다리를 절단함)를 비롯한 크고 작은 여러 전투를 거쳤고, 1942년 5월 28일 일본군의 팔로군과 조선의용대에 대한 소탕전이 벌어지자 반소탕전으로 맞서 싸우다 석정 윤세주가 피탄되어 6월 2일 순국하고 말았다.

한편 본부대 병력만을 이끌고 광복군에 참여한 약산 김원봉은 1942년 10월에 개최된 제34차 임시정부 의정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광복군 제1지대장 겸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1944년 5월 8일에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겸 군무부장(국방부장관 격)에 취임하게 되었으며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중국국민당 정부에 예속이 되어 있던 광복군의 군권을 반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던 것을 약산이 국민당 정부내에 산재한 인맥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1945년 5월에 들어 임시정부로 군권이 이양되었고, 군무부장 약산은 명실상부한 광복군의 최고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

약산 김원봉의 환국과 월북

해방을 맞아 환국한 약산은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통일된 민주독립국가의 건설'을 모토로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여오고 있었으나 친일파들의 간계에 몹시도 시달리다 못해 남북계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참석차 1948년 4월 9일 평양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북에서 검열상, 노동상 등을 지내다 1958년도에 숙청되어 행방불명되고 말았다.

약산이 월북한 이후부터는 그를 따르던 독립운동가들은 물론이고 그의 형제들마저도 이데올로기 경쟁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던 약산의 4형제(용봉, 봉기, 덕봉, 구봉)는 영문도 모르는 억울한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가족들도 홀대받고 굶주리며 숨죽여 살아야 했었다.

반대로 친일한 대가로 치부하여 모은 재산이 후대들에게도 이어져 나라를 찾겠다고 피 흘려 싸운 선열의 희생을 도외시해 버리는 비열한 자들과 일제로부터 조선 최고의 가문(?)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호의호식한 자들의 후손들을 포함해서, 일제의 주구로서 조선인으로는 유일무이하게도 일본의 중의원의원을 지낸 민족반역자 박춘금(朴春琴)의 후대들이 아직도 밀양의 독립운동사를 비웃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날의 아픔들일랑 역사 속에 묻고, 소모적이며 구시대적인 통한과 반목의 역사를 전부 청산해야 할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밀양인에 의한 항일투쟁의 빛나는 역사를 다듬어 사회발전의 밑거름으로 만들고, 피차간에 용서와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 역사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㉞

왜 ‘한일협정’을 전면 재협상 하여야 하는가?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장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 공동대표

‘한일협정’이란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 간에 조인된 기본조약, 4개의 부속협정(청구권 협정, 재일교포 법적지위 협정, 어업 협정, 문화재 협정) 및 25개 문서의 총칭이다. ‘한일협정’은 애당초부터 마지못해 응한 일본과 정권유지자금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박정희 정권 사이에 졸속으로 벌어진 한일협상의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한일협정’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괴문서(怪文書)가 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 양식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은 1964년과 1965년에 걸쳐 한일회담과 한일협정 반대투쟁에 온몸을 내던졌던 것이다.

일본이 ‘한일협정’을 통해 무엇을 노렸는지를 살펴보면 1910년의 한일병탄조약(韓日併吞條約)에 대한 일본의 기본인식, 이른바 ‘유효정당론(有效正當論)’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여 식민지배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도덕적으로도 정당했다는 이러한 인식은 일본이 결코 버릴 수 없는 철칙이다. 이러한 궤변에 한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말을 살짝 바꿔 ‘유효부당론(有效不當論)’으로 덧칠은 하였으나, ‘유효론(有效論)’이라는 기본자세는 ‘한일협정’에서도 결코 바꾸지 않았다. 한일협정으로 국가 대사를 그르쳐버린 대목은 협정문 도처에서 발견되지만 결정적으로 ‘한일협정’을 괴문서로 만든 것은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었다.

기본조약은 한일 간의 과거·현재·미래의 관계를 규정하는 ‘한일협정’의 최상위(最上位) 조약이다. 그런데도 기본조약 전문(前文)의 앞머리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희망을 고려하며...

위의 조문(條文)을 압축하면 ‘역사적 배경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 하여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역사적 배경’ 때문에 비정상 상태가 된 것을 ‘정상화’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다짜고짜로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을 구체화하면, 1910년 일본이 강압에 의해 불법적으로 한일병탄조약을 조인케 하고 한국을 식민지화하여 1945년 패전할 때까지 한국인을 탄압, 수탈한 ‘역사적 배경’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일본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는 ‘유효론’을 벗어나야 하니, 일본 돈에 눈이 먼 박정희 정권이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간 것이다. 이 결과 ‘한일협정’은 강화조약도 친선조약도 아닌 이상한 조약이 되어버렸다.

기본조약 제2조 :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¹⁾

‘한일협정’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 기본조약 제2조로서,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이로 인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법리적(法理的) 토대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조약이란 한일병탄조약을 말한다. 그 조약이 그냥 ‘무효(null and void)’라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미(already)’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붙인 것이 큰 말썽을 불러온 것이다. ‘이미’라는 말을 놓고 한국 측은 한일병탄조약이 체결된 날부

1) 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

터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일본 측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로부터 무효라고 해석한다. 대한제국과의 병탄조약체결은 유효한 것, 즉 한일병탄이 합법적인 것으로 일본은 해석한 것이다. 병탄조약이 합법적인 것이 되면 ‘배상’은 성립되지 않고 보상이나 독립축하금 정도가 될 것이라는 법리(法理)가 성립하여, 결국 ‘청구권’이라는 애매한 말을 쓰게 된 것이다.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절대로 ‘유효론’을 벗어나지 않는 일본의 자세를 방관한 결과,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이야말로 또한 치명적인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근거란 과연 무엇인가?

한일병탄조약이 유효한 것이라면 1910년 8월 22일부터 1948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한반도는 일본 영토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함으로써 한반도의 영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상실한 영토의 범위는 ‘명시적(明示的)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일본이 상실한 영토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특정한 것은 1951년 9월 8일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에서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미국 국무성이 작성한 1949년 11월 2일자 제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Liancourt Rock(Takeshima)’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의 집요한 공작으로 최종적으로 빠지게 되어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자,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우기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강력한 주장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국(締約國)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어 승전국(勝戰國)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원천 봉쇄되었다.²⁾

2) 비겁하게도 일본은 한국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1951년, 독도를 제외하고 한국을 승전국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공작을 벌였다.

기본조약 제3조 :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III)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위의 기본조약 제3조 역시 한일 양측은 조문(條文) 작성에 있어서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하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국민을 두고 저지른 절묘한 사기극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제3조의 뼈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 라는 것은 실제 상황도 아니어서 별로 큰 의미가 없지만, 미국과 소련이 극도로 대립 하던 냉전체제하에서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군부세력에게 ‘유일한 합법정부’ 라는 말은 정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한편 일본에게 ‘유일한 합법정부’ 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미묘하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힌 심각한 문제였다. 당시 한국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일본으로서는 ‘청구권’ 을 북위 38도 또는 휴전선 이남으로 한정하여 최소화하려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III)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³⁾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양측이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한 조항을 또다시 만들어낸 것이다.

일본이 이 문구를 삽입한 데에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다. 조약체결 직후 일본 정부는 총회결의 제195(III)호에 따라 ‘조선에 있는 유일한 합법정부’ 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즉 일본

3) 1948년 12월 12일 채택된 국제연합 총회결의 제195(III)호 제2항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 1965년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前 대통령. 박정희 정권이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여 졸속으로 체결한 '한일협정'은 이후 대한민국 사에 있어서 큰 논란거리를 야기시켰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북위 38도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설명했을 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문제는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총회결의 제195(III)호의 내용으로 보아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를 한반도(the Korean peninsula)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한국 정부도 총회결의의 문맥으로 보아 무리라는 점을 간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한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다. 한국 정부가 1965년 1월 25일자로 주일대사에게 보낸 '65년 회담 속개에 관한 훈령'에서 한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9. 한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의 확인과 평화조약 제2조(a) 및 유엔결의 195(III)의 취지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단계에 따라 교섭하도록 한다.

4) 이도성,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5·16에서 조인까지」, 도서출판 한승, 1995, p. 275

- 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를 협정 내에 삽입하도록 한다. 유엔결의 195(III)와 평화조약 제2조(a)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 나. 유엔결의 195(III)만을 언급하되, 동 결의의 전(全)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 다. 평화조약 제2조(a)를 부득이 인용하여야 될 경우에는 동 규정만을 특별히 인용하는 것처럼 인상을 주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위의 ‘훈령’은 기본조약 제3조의 내용을 일본 측과 협상할 때 지켜야할 사항을 지시한 내용이다. 처음에는 유엔 결의 제195(III)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에 대한 언급을 피하다가, 언급해야 한다면 유엔 결의 제195(III)만을 언급하되 전체 내용을 인용하지 말고 ‘유엔 결의 제195(III)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고 있음에 비추어’와 같은 표현을 쓰라고 예시하고 있고, 평화조약 제2조 (a)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관련된 평화조약의 각 조항을 유념하고...’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여 일본의 영토포기 명단에서 ‘독도’가 제외된 것을 감추도록 훈령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정부도 유엔 결의 제 195(III)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니 결국 기본조약 제3조 역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의 조문(條文)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하 ‘청구권 협정’)의 주요 조항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 (a) 현재의 1,080억 일본 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弗)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b) 현재의 720억 일본 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弗)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에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 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 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청구권과 경제협력 문제는 과거와 미래에 관한 문제로, 먼저 과거의 식민지배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결하고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일괄 타결을 시도, 1962년 11월 밀실에서 '김·오히라 메모'를 작성하여 '무상·유상 차관'이라는 청구권 금액의 틀을 줄속으로 결정하였고, 이 메모를 토대로 한 것이 청구권 협정 제1조 1항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한일협정을 반대하던 학생들의 논리 정연한 비판을 보자.

정치적 타결(김·오히라 메모)이란 명목으로 이루어진 3억 불은 너무나 무정건하다. 정부가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자진 포기(일본은 불과 수년밖에 안 되는 점령의 배상으로 필리핀에는 5억 4천만 불과 2억 5천만 불의 차관, 미얀마에는 배상 2억 불에 차관 5천만 불, 인도네시아에는 배상 4억 불에 경제협력 5천만 불, 월남에는 배상 3천 9백만 불에 차관 1천 7백만 불을 지급하였음)인가? 그런데 3억 불 중 대일청산계정 4천 5백만 불을 제외하면 매년 사용가능 액이 2천 5백만 불(개인에게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 포함) 정도이다. 이것은 한국경제에 있어서조차 대단치 못한 비중을 차지하는



▲ 진정한 한일 우호증진을 가능케 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한일협정'에서 나타난 미청산 과제들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이다.

소액(64년도 한국의 가용외화량은 3억 3천만 불이고 63년도 수입총액은 5억 6천만 불이었다)이며, 이것을 과거에 대한 대가로 교환해버린 정부의 처사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우리는 일본제국 정부가 제물포조약 및 한성조약 체결 시 구한국에 강압적으로 요구한 거액의 배상금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할 것인가?⁵⁾

청구권 협정 중 최근까지 문제의 중심이 된 것은 제2조 1항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규정이었다. 한국 정부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아주 중요한 내용, 즉 한국 측이 1차 교섭에서 제시하고 5, 6차 교섭에서 토의한 '8항목의 대일청구요강'에서 요구한 내용이 소멸된 경위를, 한일협정 체결 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반대운동을 우려하여 비밀에 부치고 밝히지 않았다.

'8항목의 대일청구요강'에서 요구한 내용이 소멸된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2: 협

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한일문제연구회, 「현 한일회담 저지투쟁의 정당성-한일문제 연구보고서」, '사상계' 1965년 7월호

정 제2조에 관하여' 의 (g)항에서였는데, 한국 정부가 비밀에 부쳤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조(同條)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 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 의 구체적 내용이다.

- ①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1909-1945) 지금(地金)과 지은(地銀)에 관한 청구
- ②조선총독부 체신국 관계의 청구(우편저금, 국채·저축채권, 간이생명보험·우편연금, 해외 환(爲替)저금·채권 등)
- ③한국으로부터 우편이체(移替) 또는 송금된 금원의 반환 청구
- ④한국에 본사를 둔 재일 재산에 관한 청구
- ⑤한국인 소지의 일본 유가증권(국채, 공채 등), 일본계 통화,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 은급 등에 관한 청구
- ⑥한국 법인 또는 자연인 소유의 일본 법인의 주식, 증권의 법적 인정에 대한 청구
- ⑦위의 제 재산 또는 청구권의 제 과실의 반환 청구
- ⑧위의 반환 및 결제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이 해결하고자 하는 6대 미청산 과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강제 징용자 문제/원폭 피해자 문제/미귀환 동포 문제/약탈문화재 반환 문제/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이다.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으로 '강제징용자 문제' 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지금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조약(條約)' 이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또는 조문' 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법적 구속을 받는 외교 행위 또는 문서

이다. 한일 기본조약처럼 이해당사자의 해석 여하에 따라,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반된 의미를 갖게 된다면 조약이라는 외교문서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괴문서(怪文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한 기본조약은 즉시 재협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물론 한일병탄조약의 ‘유효론’이라는 커다란 걸림돌이 있기는 하다. 일본이 아무리 ‘유효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시대의 변화를 어길 수는 없다. 이 세상에 고정불변이란 없기 때문이다.

오키나와(沖繩)가 원래 일본 영토가 아닌 류큐왕국(琉球王國)이었으니 이제는 독립시켜야 한다는 중국의 거센 주장에 일본은 당황하고 있다. ‘유효론’의 화살이 이번에는 부메랑이 되어 일본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청구권협정 제2조에 의하여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할 테지만,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2의 (g)항에는 6대 미청산 과제 중 ‘강제징용자’ 외에 나머지 다섯 과제는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나머지 다섯 과제 해결에 있어 법리(法理) 상 일본에 뒤질게 없고, 또한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인들도 사람인 이상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숨지게 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를 입힌데 대해 언제고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나 배려가 있으리라 믿는다.

한국정부가 한일협정 체결에 ‘굴욕적’ 자세로 임해 민간의 청구권을 멋대로 방기(放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6대 미청산 과제 해결에 서막을 올려 우리의 앞길에 서광이 보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9명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외교통상부가 한일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2006헌마 788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청구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⁶⁾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외교통상부 장관)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미국 의회도, 유엔도 일본군의 성노예 강요를 반인류적 범죄라고 규탄하였다. ㉔

6) 「청구권 협정」 제3조 제1항: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독도를 지키고 6대 미청산과제를 해결하려는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 출범을 맞이하여



김 학 민
前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1965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체결된 한일협정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행동’이 시작되었다. 2011년 11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독도를 지키고 6대 미청산과제를 해결하려는 -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이 출범한 것이다.

이 날의 창립대회는 ‘국민행동’ 참여 인사 소개에 이어 함세웅 상임공동대표의 개회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의 대회사, 7개 피해자 단체의 현황보고, 송철원 공동대표의 한일협정 재협상 논거 발표, 이해학 공동대표의 실행계획 발표, 4월혁명회 등 참여단체의 연대사, 이부영 상임공동대표의 선언문 낭독 및 채택 등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 8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일제에 의해 수탈당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해소하려고 적극 노력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UN 인권소 위원회의 「무력분쟁 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 유사 관행에 관한 결의」와 함께 현재의 이 판결이 이번 ‘국민행동’ 출범의 큰 계기가 되었다.



▲ 지난 2011년 11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독도를 지키고 6대 미청산과제를 해결하려는 -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이 출범하였다.

또한 경술국치 100년이었던 2010년의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 이후 한·중·일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이 선행(先行)되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한일협정의 전면적 재협상'이 관건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왔다.

특히 박정희 독재와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독도', '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유린', '사할린 등 미귀환 동포문제', '약탈 문화재 반환문제', '교과서 문제' 등이 현 시점에서 중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1965년에 잘못 체결된 한일협정에 그 뿌리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도 창립 이래 민족의 자주 독립운동이 제대로 평가받고, 친일 세력을 척결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해온바, 이번에 출범하는 '국민행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국민행동'에는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감사동회장이 고문으로, 함세웅 부회장과 이해학 이사는 각각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두엽 이사는 대변인으로 참여, 그밖에 임재경 부회장, 정동의 이사, 본 필자 등 여러 회원들도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다음은 이 날 채택된 '독도를 지키고 6대 미청산 과제를 해결하려는 -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의 창립선언문 전문이다. ㉞

창립 선언문

한일협정 전면 재협상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 시대의 책무(責務)이며,
동아시아평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초석(礎石)을 다지는 일입니다.

오는 12월 14일은,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정신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1,000회를 맞는 날입니다.

1,000번의 수요집회가 열릴 때까지, 일본정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단 한번도 사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에 의해서 '끝난 일'이라는 공식입장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되었던" 고령의 할머니들의 외침에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의 한일협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협정은 대한제국의 공성을 포위하고 체결한 1905년의 을사늑약과 1910년의 한일병탄 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잘못된 역사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36년의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기본조약 전문(前文)을 포함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일본이 미국의 압력하에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을 '매수'한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괴문서'입니다. 36년 세월의 고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그것도 '독립축하금'이라는 해괴한 명목으로 쥐어준 더러운 돈과 식민지배의 '면죄부'를 맞바꾼 것입니다.

당시 학생과 시민들은 '6·3운동'으로 불리는 강력한 반대시위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박정희 군사정권의 살벌한 계엄령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주역들이 이제 칠순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일협정, 그 후 46년의 세월동안, 독도는 일본교과서에 '일본 땅'이라 기록되어 있고, 생명과 재산을 약탈당한 한국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배상받을 길은 봉쇄당했으며, 약탈문화재의 반환은 포기되었고, 징병·징용으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들의 유해봉환과 미귀환 동포들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 '잘못 체결된' 한일협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直視)해야 합니다.

한일협정 전면 재협상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통과해야 할 필수적 관문(關文)입니다. 교과서의 30%를 히틀러 치하에 대한 반성에 바치고 있는 독일에 비해,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은 세계인의 존경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달한 국가'에서 '열린 국가'로 전환되기 위해서도, 한일양국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부독재시대의 유신헌법이 결국에는 폐기되었듯이, 군부독재가 국민의사를 '계엄령'으로 짓누르고 체결한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국제조약도 재협상될 수 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면 재협상'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제, 한일협정 전면 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運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민족적 의분'과 '민주적 각성'으로 일어섰던, 칠순이 다된 6·3운동의 선봉들이 다시 전위(前衛)가 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찬 전진(前進)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에게 '떳떳한 나라'를 물려주고, 전쟁의 '통곡'이 없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아 주십시오.

2011년 11월 18일

독도를 지키고 6대 미청산과제를 해결하려는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 준비위원 일동

순국선열의 날, 창무극 〈백범 김구〉 관람을 다녀와서



정혜진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3학년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지난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었다. 이 날이 되기 며칠 전부터 학교가 있는 용산구에서는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는 깃발들이 거리 곳곳에 즐비해 있었다. 학교를 올라오면서 보게 된 현수막에는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용산구에서 창무극 〈백범 김구〉를 무료로 공연한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다. 그 현수막을 보자마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아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인데 학교 바로 옆이라 가깝고, 또 무료 공연이었던 터라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아까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위인을 소재로 한 창무극을 보는 것은 처음이고 또 백범 김구 선생의 일생이 어떻게 무대에서 펼쳐질지, 공연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국악 소리는 어떨지 등등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하는 부분이 많았기에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일 학교에서 일을 마치자마자 공연이 열리는 용산아트홀로 급히 출발했다. 시간은 2시간이나 남았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밖에 예상이 되지 않았지만 무료 공연인 만큼 일찍 도착해서 좋은 자리표를 받고 싶었기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용산아트홀을 처음 방문해 보는 거라 걱정했었는데 녹사평역에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 용산구청 지하에 위



치해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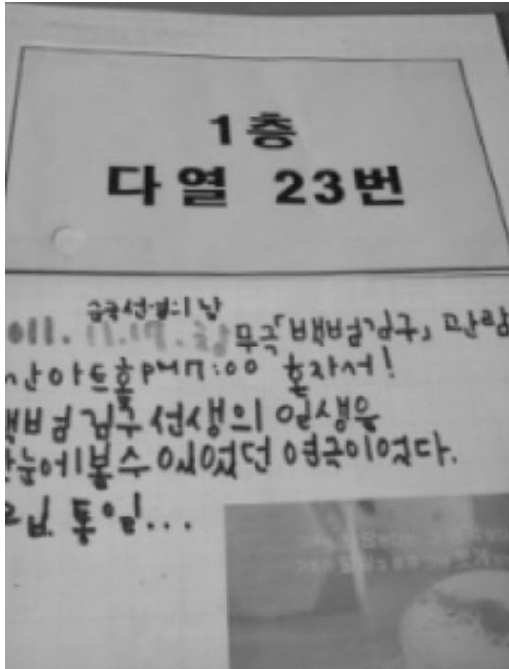
도착해 보니 역시나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고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해 있었다. 관계자에게 공연 입장이 몇 시부터인지 여쭙어 보고 관람권을 미리 받아 놓았다. 자리는 R석으로, 공연장의 가장 앞쪽 자리였다. 공연까지 한 시간 반 정도 남았기에 공연장 앞에서 가져온 <백범 김구> 공연 정보가 담긴 팸플릿을 읽어보았다. 팸플릿 제일 앞표지에는 광복 66주년을 기념하고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2주기를 추모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안의 내용에는 공연 관계자들의 축사와 제작진, 연기를 하는 창작부, 음악을 담당하는 여러 국악단의 소개와 더불어 백범 김구 선생의 연보와 이번 공연의 줄거리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

드디어 공연 시작 시각인 오후 7시를 10분 남겨두고 공연장 입장이 시작되었다. 사전에 자리가 좀 바깥쪽이라 가운데 쪽으로 바꾸어 달라 부탁을 드렸지만 그 좌석들은 이미 공연 관계자들의 예약된 좌석이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배정된 좌석에 만족해야 했다. 대신 무대와 가까웠던 내 좌석은 무대와의 사이 공간에 국악 연주자들이 있어 공연 내내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가야금, 아쟁, 해금 등등 창무극과 어우러진 우리의 아름다운 소리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정말 좋았다.

공연은 총 2막으로 종장까지 총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막은 19세 청년인 김창수가 해주성으로 향하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명성황후와 충신이 시해되고, 이로 인한 분노로 왜적을 해치운 김창수가 사형선고를 받고도 당당한 모습을 잊지 않고 조국의 자주독립에 대한 염원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2막은 김창수가 백범 김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나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활동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인에 국단에서 함께 뜻을 한 동지들을 떠



▲ <백범 김구> 공연 포스터



▲ 필자의 <백범 김구> 관람권

나보내고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활약하는 모습을 담았다. 마지막 부분은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졌지만 분단된 조국을 하나 된 조국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 남북협상을 시도하는 등의 활동을 해 나가지만 결국 이념을 달리하던 인물의 총에 맞아 서거하시게 되는 장면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일생과 활약을 한 눈에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청년 김창수'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싸워온 '백범 김구'까지, 그리고 조국의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끝내 통일이 되지 못한 조국을 떠나가실 때까지의 과정이 공연에 모두 담겨져 있었다. 공연시간 2시간

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열중해 있을 정도로 창무극은 정말 멋있었다.

공연을 보는 내내 연기와 노래가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무대 위의 그들의 몸짓, 또한 배경음악을 이루는 국악 소리에 심취해 특히 더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극의 중간 중간 내용에 맞추어 실제 독립 운동가들의 사진들과 아름다운 배경이었던 수목화도 극에 묘미를 더한 부분이었다.

관객들 중에는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역시 공연과 국악 소리에 흥이 나셨는지 그 소리에 맞춰 추임새를 넣는 모습이 다른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기도 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문구를 각국의 언어로 쓴 티셔츠를 입고서 태극기를 가방에 달고 다니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한 아저씨도 공연에 열렬히 집중하고 공연 한 장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며 공연에 대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잠시 후, 1막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뒷줄에 앉아 있던 할머니들과 그 아저씨의 대화를 들어보니 그 아저씨는 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흥



보화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엔 겉모습을 보고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궁금했는데, 그 대화를 듣고 나니 정말 훌륭한 분과 옆에서 함께 공연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느껴졌다.

마지막 커튼콜 때 배우들이 나오면서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노래와 관현악 반주는 나를 비롯한 관객 모두의 심금을 울렸다. 그 소리는 정말 아름다웠고 독립을 염원하는 가사가 나의 뇌리에 계속 반복되어 울렸다. 대한독립 노래는 계속 반복해서 울려 퍼졌고, 마지막 노래가 막을 내릴 때까지 난 공연장을 떠날 수 없었다.

두 시간의 짧은 공연이었지만 그 속에서 한 위인의 일대기와 한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쳐 조국의 독립은 이루었지만 통일이 되지 못해 진정한 조국은 보지 못하고 하나의 소원만 이루고 돌아가신 백범 김구 선생님. 통일이 되어 대한민국이 삼천리 아름다운 조국으로 온전히 돌아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진정 기뻐하시면서 편히 떠나실 그날이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날이 도래하리라고 염원해 본다. ☺



〈레드헌트〉,

4·3 사건의 잊혀진 얼굴들



이 두 희
자유기고가

1992년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다량쉬 오름 부근의 한 용암동굴에서 4·3사건의 희생자들로 보이는 십여 구의 유골들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곧 당국에 의해 유해는 서둘러 화장이 치러지고 다량쉬굴은 입구마저 영구 폐쇄되고 만다. 조성봉 감독의 다큐멘터리 〈레드헌트〉(1997)의 첫 장면은 그곳 다량쉬굴에서 시작하고 있다.

영화는 해방 직후 시점으로 돌아가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복기한다. 당시 남한 사회의 전반적인 혼란은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군정의 양곡정책은 실패하고 대일무역이 금지된 제주도에 기근까지 겹쳐 민생은 어려워졌고, 군정경찰에 잔류한 일제강점기 친일 관리의 횡포까지 더해지고 있었다.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를 기점으로 학생들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까지 일어나자, 제주도민들은 일련의 단체행동으로 파업에 들어갔고, 결국 이듬해 4월 3일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의 우익단체들을 상대로 무장봉기가 일어나기에 이른다. 그러나 봉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투표율 미달로 5·10 선거를 무산시킨 제주도민들에 대해서 미군정과 이후 이승만 정부는 초토화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칭 ‘빨갱이 사냥(Red Hunt)’에 들어간 것이다. 이후 무장대 대장의 사살과 6·25 전쟁의 발발

까지 연루자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고, 한동안 4·3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침묵한 것처럼 보였다. 그저 당시 토벌대에 의한 희생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왔었다.



다큐멘터리 <레드헌트>는 이러한 제주도의 역사를 당시의 신문자료들과 미군정보고서, 그리고 연구자들과 생존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만들어간다. 뉴스 영상, 기록 사진들, 그리고 역사화들을 차례로 보여주던 영화는 곧 목격자들의 증언을 따라서 제주도 지역 곳곳의 보이지 않는 흔적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유해조차 찾을 수 없이 만들어진 헛묘들과 또다른 다랑쉬굴이었던 큰 넓괘(동굴), 한 많은 바다를 바라보는 정방 폭포를 지나서 동광리, 가시리, 함덕리와 같은 마을 이름들이 차례로 되뇌어



지고, 영화는 수만 명의 사상자라는 추상적 숫자들을 폐촌의 학교 운동장에 쌓여있던 수십 수백구들의 시신들로, 수습조차 못한 채 몇 년씩 버려진 주검들이 있던 들판의 풍경들로 하나하나 되살려 보고자 한다.

하지만 해설적이고 조금은 단조롭기도 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형식 속에 그 풍경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담아낼 방법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영화가 선택한 것은 차라리 그림이 아닌 말과 글이었다. <레드헌트>는 감성적 이미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4·3 사건의 배경과 결과에 대한 역사적 개연성을 조금 더 명확히 밝히고자 하고 있다. 해방 이후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에서 반공이데올로기로 왜곡된 국가정통성의 희생양이 된 제주도민들의 역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영화의 정치적 균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고발은 무엇보다 지난 시대의 군부독재와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와는 또 다른 심급의 논쟁으로 이어지기를 바랬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 이후 이루어진 기념사업들의 추진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처리가 충분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침묵하는 풍경들에 다시 답을 구해봐야 할 것이다.

첫 관람 이후 14년 만에 다시 보게 된 <레드헌트>에서 가장 다르게 다가온 한 장면은 한 할머니



“

첫 관람 이후 14년 만에 다시 보게 된 <레드헌트>에서 가장 다르게 다가온 한 장면은 한 할머니가 사무치게 고통스럽던 그 기억조차 이제 세월이 흘러 때때로 ‘잊혀질 때가 있다’고 말하는 인터뷰 장면이었다. 결국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당신의 그 한마디는 삶이 그저 희망 또는 슬픔이라는 연륜 때문이겠지만, 정작 우리에게 지금 또다시 잊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누구일까.

”



가 사무치게 고통스럽던 그 기억조차 이제 세월이 흘러 때때로 ‘잊혀질 때가 있다’고 말하는 인터뷰 장면이었다. 결국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당신의 그 한마디는 삶이 그저 희망 또는 슬픔이라는 연륜 때문이겠지만, 정작 우리에게 지금 또다시 잊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누구일까. 십여 년이 지나 다시 보는 영화는 그 얼굴들과 목소리들이 이미 사라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의 영화와 함께한 역사의 순간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멈출 때 잊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97년 당시 영화 <레드헌트>의 상영은 그 자체가 큰 사건이기도 했다. 이른바 사전심의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등의 적용으로 영화를 상영한 인권영화제 대표 서준식 씨가 구속되었고, 이는 곧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범사회적인 저항 운동으로 이어진다.

곧 대학가를 중심으로 <레드헌트>를 포함한 인권영화가들이 동시다발 상영되었고, 영화심의법의 개정과 이적성 판단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들이 개진되며 이후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들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2011년 현재 공식적인 배급처가 없는 이 영화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은 국공립 도서관의 영상자료실뿐이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좀 더 발전했다면 독립다큐멘터리의 상영과 배급 현실 역시 함께 더 나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감독은 속편으로 알려진 <레드헌트2 : 국가범죄>를 제작하였고, 얼마 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에서 본편과 함께 상영했다고 한다. (G)

어머니 전상서

- 반민특위 위원장 영주 김상덕 선생의 아내이자 필자의 어머니 강태정(姜泰禎) -



김정륙
반민특위 위원장 영주 김상덕 선생 자

어머니!

채 말도 트기 전에 세상을 떠나시어 맘껏 불러보지도 못한 소리, 어머니.

그러기에 하늘이 허락하는 천수에 가까워 가면서도 저는 어머니가 그리워지나 봅니다. 아마도 이것은 연의 끈이 평생 몸을 감도는 태생적 본능이기 때문인가 합니다. 어릴 적 민혁당 대가족이 모여 사는 손가화원에서 누구보다도 힘들게 어린 생명을 부지해야 했던 우리 남매는 어머니의 품이 없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어머니 가신 지 채 한 해도 버티지 못하고 막내 영이가 따라간 것도 이 탓입니다. 막내를 애장하고 돌아온 아버지께서 그길로 기약할 수 없는 어린 남매를 지키기 위해 고아원에 맡겨버린 바람에 저는 영이의 어린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티 없이 자란 영이는 아마도 어머니 곁으로 갔다고 봅니다. 짧게 세상에 머물다 굶주려갔으니 어머니! 잘 보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차마 놓고 갈 수 없는 어린 남매를 두고 떠난 사연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새겨두었습니다. 어머니 병세가 침중해지자 아버지는 번거로운 양팡즈(洋房子)에서



◀ 영주 김상덕 선생(1892년~1956년)
도쿄 28 독립선언의 주역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었던 영주 김상덕 선생은 광복 후 제헌 국회의원과 반민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6.25전쟁 때 납북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양자강가 종팡(中房)의 외딴 기와집으로 어머니를 옮겨 안정시키려 했지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병세가 숨 가빠지자 조선의용대원 한 분을 급히 보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도록 저를 종팡으로 끌고 간 것을 기억합니다. 문안에 들어서자 어린 저의 눈에 확 들어온 것은 커다란 주사를 어머니 팔에 꽂으려는 한 선생(의사)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머니를 잡는 행동으로 보고 달려들어 온몸으로 막으며 몸부림을 쳤지요. 그 때 힘없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저를 보시던 눈길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욱 날뛰었고, 아버지는 이 견잡을 수 없는 난리를 진정 시킬 수 없게 되자 의용대원에게 저를 강제로 안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셨지요. 이것이 기적을 붙잡고 어머니를 살려보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간구인 것도 모르고 몸 쓸 짓을 한 대가로 저는 어머니의 임종을 놓쳤으니 이 형벌은 두고두고 저를 한스럽게 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당시 네 살짜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깊은 수 읽기였기에 저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아원에 들어가기 직전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의용대원 한 분과 나지막한 산으로 산행을 오르셨습니다. 비 온 뒤 후텁지근한 날씨라 초입에 있는 초려에 앉아 차 한 잔으로 목을 축인 후 산에 오르니, 중간지점에 평퍼짐한 초원이 나오더군요. 아버지는 저에게 주변에 피



▲ 중국 화상산에 있는 필자의 어머니(강태정 여사) 옛 묘터. 현재 도시개발로 인해 묘소가 사라져 잡초만 무성하다.

어있는 노란 들국화를 따오게 하셨습니다. 멋모르는 저는 신바람 나게 뛰어 다니며 예쁜 것만 골라 손에 가득히 따다 아버지께 드렸고요. 이를 반듯하게 다듬은 아버지는 돌 제단 위에 얹고 저에게 큰절 두 배 반을 시킨 것이 아스라이 멀고도 시공은 엇그제처럼 느끼게 합니다. 여기가 어머니를 모신 제단이었고 제가 어머니를 뵈는 마지막 장면이 되었습니다. 노란 들국화는 조국을 보지 못하고 떠난 한을 머금고 피어났다고 해서 현지인이 부른 차우웬화(朝鮮花)였음을 먼 훗날 알게 됩니다.

어머니! 귀국 후 아버지는 고향에서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헌법기초위원, 반민특위 위원장 등 나라세우기에 헌신하다 6.25사변을 만나 납북되었습니다. 이 참담한 세월을 아버지는 북에서, 저희 남매는 남에서 겪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2006년 10월 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숙원사업이 어렵사리 이루어져 저는 누나와 함께 성묘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내일 모레면 돌아온다며 북측의 차를 타고 가신 아버지는 평양 룡성지구 재복인사묘역에 계셨습니다. 56년 만에 유명(幽明)을 달리한 부자상봉의 비극이었습니다. 묘비를 보니 1956년 4월 28일(음 3.17) 세상을 떠난 것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만나 보셨습니까? 너무나 가혹한 생을 살다 가셨으니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영이 그리고 며느리, 다함께 모여 평화를 누렸으면 합니다.

| 백년편지 |

200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독립정신답사단을 따라 7월 17일 화상산에 도착했습니다. 평생의 소망을 이루는가 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그곳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음산공묘관리소’에는 아무기록도 없었고, 수 없이 많이 세워놓은 비석을 저희 일행 칠십여 명은 모두 열심히 뒤져보았으나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 초라한 제단에 향을 피우고 어머니께 술을 올리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소자 능이가 왔습니다. 이제사 찾은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제 한 맺힌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 저는 엎어져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보셨습니까?

1986년 공고를 내고 6개월 만기가 되자 이장이 되지 않은 묘소는 무연고 처리해 전부 밀어버렸다는, 전율로 온몸을 떨게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무렵이면 중국은 우리나라와 적대적 관계조차 풀지 못한 미수교 상태였습니다.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륜폐해가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던 제단 위치를 찾아 혼신으로 머리를 짜내어 가장 근접한 곳에서 흙을 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자 진영이는 날이 밝자 성당을 찾아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워한 조국의 황토흙으로 빚은 납골함 속에, 이를 어머니의 혼(魂)으로 삼아 모셔 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돌아가신 날짜를 몰라 해마다 음력 9월 9일에 제사를 모셔오다 이제야 기일을 알게 되어 음력 3월 17일에 제상(祭床)을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한적한 전원으로 들어와 후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가화(家花)를 진달래로 했습니다. 향기가 넘치지 않고, 자태가 교만하지 않으며, 청렴, 절제, 사랑을 나타내는 꽃말이 우리 집 가풍에 딱 맞아 떨어졌기에 정한 것입니다. 조용한 이곳에 아담한 정원을 가꾸고 자그마한 진달래 동산을 만들어 어머니, 그리고 꽃을 좋아하는 며느리가 즐겨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머니! 며느리 얘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납북되자 연좌제에 묶여 음

짜달짝 할 수 없는 우리 쇠락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에 들어와 손자 진영, 손녀 경은을 낳아 대를 이어준 며느리가 정작 자신은 가난하게 아프다 갔습니다. 불행했던 저의 조건을 함께 반려하면서 우리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며느리는 최선을 다하고 갔습니다. 어머니! '이 건자', 며느리 이름입니다. 부디 따뜻이 보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한적한 곳에서 아프게 가신 아버지, 어머니, 영이, 그리고 며느리.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안식처를 저는 마련할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애사(哀事)를 우리 모두 겪었기에 이 일은 저의 절대 소명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손자 또한 한 마음으로 돕고 있으니 우리 집 하늘의 문은 머잖아 열릴 것으로 보며, 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소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그 때까지 평화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

송건호 평전

:: 김삼웅 지음, 책보세 펴냄



▲ 「송건호 평전」

오는 12월 21일은 '언론인의 사표'로 존경받는 청암 송건호 서거 10주이다. 그가 생전에 주장하고 몸소 실천했던 언론인으로서의 '정신'과 '자세'는 그의 시대에도 절실했지만, 그가 떠난 지 10년이 지난 오늘날에 더욱 절실하다. 청암의 전기이자 평전이기도 하지만 그대로 한국 현대언론사이자 한국현대 정치사이기도 한 이 책은, '조심스러운 언론인'이 어떻게 '역사의 사람'으로 되어 가는지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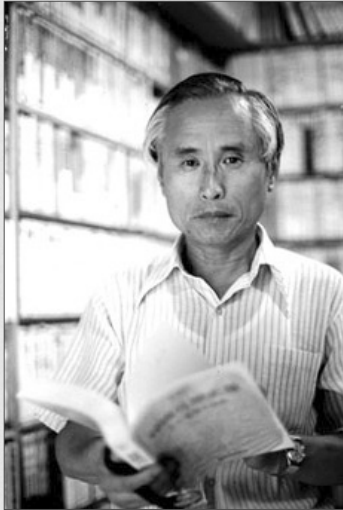
'역사의 사람'으로 살다간 '조심스런 언론인' 송건호, '육당의 길'을 마다하고 '단재의 길'을 걷다!

“(기성) 정치는 죽었다!” 이른바 ‘안철수 현상’ 앞에서 제도 정치권이 내지른 이 비명은 “니들(기성 정치인들)은 이제 다 죽었다!”는 유권자들의 선언으로도 환치된다. 어떤 영역이든 거기에 ‘전문’으로 복무하는 자들이 직무를 유기하면 대중은 언제고 그들을 ‘제외’ 시켜버림으로써 ‘대리인’ 자격을 회수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제도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자 마침내 시민들이 저마다 스스로 ‘언론’이 됨으로써 제도언론을 공론의 장에서 시나브로 ‘제외’ 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여전히 견재하다.

오늘날 이런 언론현실에서, ‘참 언론’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 ‘참 언론인’의 표상이 바로 청암 송건호다. 청암 서거 10주기에 맞춰 나온 「송건호 평전」은 그의 정론정신을 기리는 헌사이자 현직 언론인들에게 울리는 경종이다. 저자 김삼웅도 줄곧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온 언론인으로서 일찍이 청암을 사숙하여 곡필언론 연구의 일가를 이뤘다. 김삼웅은 이 평전을 쓰기 위해 청암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를 섭렵했다. 청암의 삶과 인간적인 면모는 물론이고 그가 남긴 중요한 글과 저서는 거의 모두 그 핵심을 짚어 논평했다.

청암은 일제강점기 식민체제가 안착된 시기(1926년)에 충북 옥천(「향수」의 시인 정지용의 고향이기도 하다) 산골에서 태어나 ‘황국신민화’ 교육을 받으며 자란 탓에 전쟁에서도 ‘우리나라’



▲ 청암 송건호 선생의 생전 모습

(일본)가 이기기를 바랐던 '제국의 국민'일 수밖에 없었다. 즉, 민족의식의 세례를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 청암은 15세에 서울로 유학(한성상업학교)을 온 이후에야 헌책방을 순례하며 왕성한 독서를 통해 민족의식에 눈뜨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일상처럼 이어진 그의 헌책방 독서는 한국현대사 연구의 밑거름이 되었다.

청암은 정론직필을 선두에서 이끌었고 새로운 언론 창달을 주도한 언론계의 거목이기도 하려니와 한국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연 선구자이자 대가이기도 하다. 8·15 해방 이후 이승만의 백색독재, 박정희의 군부독재 아래서 친일파들이 득세하자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이 현대사 연구를 기피하여 현대사 연구가 불모지로 남아 있을 때 언론인

송건호는 홀로 현대사 연구에 매진하여 빛나는 업적을 쌓았다. 그는 특히 '민족지성' 문제(친일 청산 문제)에 천착하여 민족의 양심을 바로세우고자 노심초사했다. 따라서 당연히 그의 역사 기술은 '과학으로서 역사'라기보다 '가치로서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자기가 사는 시대의 연구와 서술에 대한 역사가들의 책무가 그 역사적 권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라는 게르비누스의 주장은 '불행한' 한국현대사를 끌어안고 고심참담하던 청암에게 절실한 울림이었다. 그는 평생을 그 '울림'에 충신했다.

청암은 '길'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던 진정한 '지사'였고, 불의에 맞서서는 어떤 핍박도 마다하지 않았던 불굴의 '투사'였다. (C)

6월 항쟁

:: 서중석 지음, 돌베개 펴냄



▲ 「6월 항쟁」

6월 항쟁 25주년이 되는 2012년을 앞두고, 6월 항쟁의 전 과정을 생생히 복원하고 그 역사적 의미와 유산(遺産)을 현재적 시점에서 평가하려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서중석 교수. 저자는 서문을 통해 “수십 년 싸워서 얻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남북화해와 평화가 너무 쉽게 훼손되고 후퇴”하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에 개탄하면서, 시위와 투쟁을 통해 ‘공동선’을 추구했던 선배들의 헌신성을 젊은 세대들이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6월 항쟁은 박정희 때부터 이어진 30년 간의 독재시대를 끝내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이정표적인 사건이었다. 저자는 6월 항쟁을 1945년 8·15 해방, 1960년 4·19 혁명에 이어 한국인이 맞은 세 번째 ‘해방’이라고 강조한다. 30년간 줄기차게 전개해온 민주화운동의 정점에 6월 항쟁이 ‘우람찬 봉우리’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6월 항쟁으로 남북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렸고, 오늘날 우리 시대가 경험하는 자유·인권과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바로 이 점이 저자가 6월 항쟁을 1945년 해방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역사적 위상을 높이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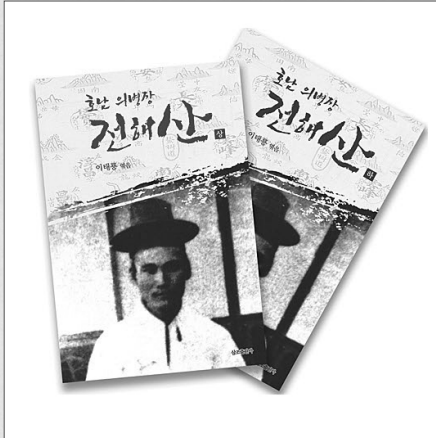
6월 항쟁의 전 과정 한눈에 담아

이 책은 6월 항쟁의 전 과정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훌륭한 역사 교본이다. 저자는 6월 항쟁 기간에 벌어졌던 주요 시위와 농성을 시간적 경과에 따라 꼼꼼히 기술했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민중의 분노가 6·29 선언으로 결실을 맺을 때까지 6월 항쟁의 전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히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조치 이후 불붙기 시작한 민중시위가 명동성당 농성투쟁, 6·10 항쟁, 6·23 평화대행진으로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 순간들을 현장감 있게 담아낸 것은 이 책의 백미다. 지역별·시간대별·사건별로 시위 전개 과정을 박진감 있게 기술해 글의 생동감을 더했다. 시위대별 구성 주체와 시민들의 반응 등 당시 자료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6월 항쟁에 대응하는 전두환 정권 측의 반응과 동향까지 더해 6월 항쟁이라는 큰 그림에 입체감을 부여했다.

또한 이 책은 서울에서 벌어진 시위 못지않게 지방에서 벌어졌던 시민·학생 시위의 역할을 비중 있게 다루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부산과 광주 등 주요 대도시는 물론, 원주와 순천 등 중·소도시에서 벌어졌던 지방의 동시다발적 시위가 전두환 정권의 공권력 한계를 드러내게 한 것에 6월 항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서다. (서)

호남의병장 전해산 (상·하)

∴ 이태룡 엮음, 삼조출판사 펴냄



▲ 「호남 의병장 전해산」

「호남의병장 전해산」(상·하)은 전북 무주 소재 푸른꿈고등학교 교장 이태룡(문학박사)이 구한말 호남지역에서 연합 의병부대를 이끌고 의병투쟁을 전개하던 와중에 순국한 전해산(全海山)(1879~1910) 의병장의 삶을 엮은 책이다.

책의 상권은 전해산 의병장이 의병투쟁을 벌일 때 손수 쓴 「진중일기」(「전해산진중일기」로 통칭)와 「한국독립운동사」자료(일본 경찰이 기록한 「폭도에 관한 편책」번역본) 8천여 쪽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하권은 광복 후 친족과 장수향교에서 펴낸

「해산창의록」을 번역하고, 전해산 의병장에 관한 논문이나 기사들을 묶은 것이다.

전해산 의병장은 본명이 기홍(基泓)이고, 자는 수용(垂鏞)으로 전북 임실 출신이다. 해산(海山)은 의병투쟁을 전개할 때 산과 바다를 누비며 활동하겠다는 의미로 자호(自號)한 것이다.

전해산 의병장이 국권회복을 위해 붓을 던지고 의병투쟁에 나섰던 것은 1907년 가을이었다. 의형(義兄) 이석용(李錫庸) 의병장과 전북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이듬해 봄에 왜적의 공격으로 의병이 흩어지자 자신은 전남으로 가서 의각지세(倚角之勢)로 싸우기로 했다. 그는 전 친위대 참위(척임관) 정원집(鄭元執)이 허리띠에 숨겨서 가지고 온 고종황제의 의대조칙(衣帶詔勅)을 받은 후 대동창의단(大東倡義團)이라는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의병장에 올랐으니 호남지역 의병장으로서 유일무이한 경우였다. 이어 그는 호남 주요 의병부대 11개로 구성된 '호남동의단(湖南同義團)'의 대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전해산이 남긴 「진중일기」와 일본 경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의병들이 보잘것없는 무기로 일본 군경과 그들 앞잡이들을 격파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일본 군경이 일진회 무리들을 앞잡이로 삼아 의병부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전담 토벌대를 편성하거나, 밀정과 일본 수비대, 경찰을 주축으로 하는 변장정찰대를 구성하여 의병 살육전을 벌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 경찰의

비밀기록에는 전해산 의병부대에 참여한 의병이 300~500명이었고 투쟁기록이 100차례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 책은 주요 의병투쟁 기록을 담고 있어서 당시 의병과 일본 군경과의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자료로서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0여 년 전 한말의병은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내던지고 왜적(倭賊)과 싸워야 했다. 과거 임진왜란이나 몽골군을 상대로 싸웠던 것과는 판판이었다. 옛날에는 무기 수준이 비슷했기 때문에 의병투쟁은 군인과 민간인의 싸움 정도에 비할 수 있겠으나 한말의병은 창이나 칼, 화승총을 들고 6연발총, 기관총을 휴대하고 기마병까지 동원된 왜적을 상대로 승부를 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었다.

화승총 들고 싸워봐야 왜적의 상대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의병에 참여하면 가족의 삶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왜적을 치러 나가면 목숨을 잃게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가까이 떨쳐 일어섰던 이가 한말의병이었다.

왜적들의 주요 의병 살육전을 보면, 1907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왜경(倭警)이 간여한 살육전 횟수 1,976회, 의병수 82,767명, 순국자 5,721명, 포로 1,081명, 불탄 집이 1,991채였고, 의병 살육을 위한 왜군(倭軍)은 북부수비관구에 보병 6개 연대, 기병 1개 연대, 야포병 1개 연대, 공병 1개 대대를, 남부수비관구에 보병 3개 연대, 기병 1개 대대를 동원했으니,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때보다 오히려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의병 살육전을 전개했다.

왜적은 호남의병 살육을 위해서 1908년 2월 기구지(菊地) 대좌를 대장으로 대규모 살육부대를 편성하고 3월까지 의병 대살육에 나섰다. 이 기간 동안 150여 회에 걸친 살육전을 통하여 의병이 입은 피해는 사망 756명, 부상 수백 명, 포로 700여 명에 이르렀고 이듬해에는 이른바 '남한 의병 대토벌'을 위해 일본군 2개 연대를 동원했는데, 1개 연대는 경남 서부지역에서, 1개 연대는 전북지역에서 각각 전남 방면으로 의병 살육에 나섰으니 9월 1일부터 시작된 대살육전이 두 달 동안 전개되어 420명의 의병이 순국하고 1천 687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전해산 의병장의 체포에 대한 일제의 비밀기록도 이 책에 실려 있다.

전라북도 임실군 남면 국화촌 호전동(狐田洞)

적괴 전수용(全垂鏞, 일명:基洪·鍾輝, 호:海山) (31세)

이 자는 전남에 있어서의 폭도 거괴(巨魁)로서 명치 41년 음력 1월 적도(賊徒)에 투신하여 그 해 음력 8월경부터 호남의장(湖南義將)이라고 자칭하고 부하 약 3백 명을 인솔하였다. 그는 누누이 아(我) 토벌에 항거하고 혹은 관아를 습격하는 등, 극력으로 일본을 배척하려는 목적을 이루고자 행동한 자였는데, 근래 어디론가 도피하였으므로 수색 중이던바, 지난해 12월 18일(17일-엿은이 주) 오전 3시 전북 장수군 중부면 하동화리(下洞花里)에 잠복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체포하였다.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일본의 대한(對韓) 정책에 분개하여 적(賊)에게 원(援)하고 호남의장이라 자칭하고 활동한 자라 한다.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7권, 59~60쪽)

사형집행(死刑執行)

전수용(全垂鏞)은 내란(內亂)과 모살(謀殺)의 죄를 인하여本年 7월 9일에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에서 사형의 선고를 수(受)하고 동년 8월 23일에 집행한 바가 되니라.

(「조선총독부 관보」제4호, 명치 43년 9월 1일)

「호남의병장 전해산」에는 전해산 의병장이 영산포 일본군 헌병대로 끌려갔다가 광주감옥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어 대구감옥으로 이감 및 교수형으로 순국한 사실까지 철저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2010년 8월 23일 전해산 의병장의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엮은 것으로 청소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았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한말 호남 의병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음은 물론, 국권회복(國權恢復)을 위해 신명을 바친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이름조차 없이 스러져 간 의병들의 숭고한 삶과 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㉞



2011년도 임정 '송년의 밤' 행사



본회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20일 (화) 종로구 적선동 경희궁부페에서 개최되었다. 본회 회원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새롭게 다짐하고자 하는 뜻에서 개최된 이 날의 '송년의 밤' 행사에는 약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본회 김자동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송년의 밤' 행사는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

으로 함께 부르는 독립군가 합창, 퀴즈 게임 및 행운권 추첨을 통한 선물 증정 등으로 많은 회원들이 즐겁게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특히 이 날의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 중에서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학생대표이기도 한 임대현 군(서강대 사학과)은 “제7기 독립정신 답사단 해단식 이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임정 '송년의 밤' 행사를 계기로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다”며 이날 즐거웠던 행사 분위기를 전했다.

단재 신채호 선생 탄신 131주년 기념 학술포럼

단재 신채호 선생의 탄신 131주년 기념 학술포럼이 지난 12월 6일(화)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회장:김원웅)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기존의 단순한 추모식 형식이 아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지금 시대에 남긴 정신을 바탕으로 선생의 업적을 되짚어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날 학술포럼에는 본회의 김자동 회장과 김삼웅 이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제5회 임종국상 시상식

제5회 임종국상 시상식이 11월 11일(금), 조계사 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 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사회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임종국상 수상자는 학술부문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부문 이민석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임종국상은 민족사 정립을 향한 임종국 선생의 실천적 삶과 뜻을 기리기 위해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상으로서,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되어 이제 다섯 번째 수상자를 맞이하게 되었다.

독립정신 산악회 소식

지난 2011년 11월 26일(토)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산하 <독립정신 산악회>에서는 금년 마지막 산행을 다녀왔다. 산행 장소는 서울 북한산 둘레길이었으며,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산악회원들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내년 2012년도 첫 산행은 2012년 3월, 인왕산에서의 시산제로 시작될 예정이다.



※ 독립정신 산악회 산행 일정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opogo.com)를 통해 공지가 나가고 있으며, 산을 사랑하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창립총회



지난 12월 15일(목)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항일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본회와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등 총 17개 단체가 참여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한일협정 무효와 재협상, 바른 민족사관 정립, 남북의 평화체제 성립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연대사업으로는 학술사업, 한중일 공동 역사 복원·평화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연합회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지닌 민족으로서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고 민족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것”이라며 “후손에게 바른 역사를 전하고 친일파에 대해 역사의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각 단체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맡고, 이 가운데 본회 김자동 회장이 상임공동대표에 선임되었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1년 11월, 12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11월	12월
강만길	20,000	
강재욱	20,000	20,000
강찬모	20,000	20,000
곽태원	50,000	50,000
권상윤	10,000	10,000
권순갑	20,000	20,000
권영관	10,000	10,000
길시원	10,000	10,000
김경애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김광재	5,000	5,000
김동현	10,000	20,000
김모현	20,000	
김보성	10,000	10,000
김봉현	30,000	30,000
김삼웅	10,000	10,000
김선근	10,000	10,000
김성근	10,000	
김성록	10,000	10,000
김소중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김연실	10,000	10,000
김영림	30,000	30,000
김용덕	10,000	
김용수	5,000	5,000
김원규	10,000	10,000
김원유	50,000	
김 위	20,000	20,000
김위현	50,000	50,000
김윤수	30,000	30,000
김의정	20,000	
김지동	100,000	100,000
김재홍	10,000	10,000
김정경	10,000	10,000
김정인	10,000	10,000
김종규	10,000	10,000
김정록	100,000	50,000
김중배	20,000	20,000
김중숙	10,000	10,000
김진경	5,000	5,000
김진모	20,000	20,000
김진영	10,000	10,000
김진현	50,000	50,000
김판수	5,000	5,000
김학근	10,000	10,000
김현모		10,000
김호진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남만우	30,000	30,000
노시선	30,000	30,000
류동연	5,000	5,000
류시경	30,000	30,000
민향선	20,000	
박경국	10,000	10,000
박녹삼	10,000	10,000
박두근	10,000	10,000
박아영	10,000	10,000
박양수	10,000	10,000
박원표	50,000	50,000
박은봉	30,000	30,000
박익란	30,000	30,000
박인석	10,000	10,000
박정근	30,000	30,000
박형순	10,000	10,000
반병률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백영미	10,000	10,000

회원명	11월	12월
변병식	100,000	100,000
서영훈	30,000	30,000
서홍관	30,000	30,000
성인재(약주)	100,000	100,000
신명식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신영한	10,000	10,000
신준수	20,000	20,000
심재권	30,000	30,000
안영찬	5,000	5,000
안효진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양진호	10,000	10,000
엄기남	50,000	50,000
염승훈	10,000	10,000
오승숙	10,000	10,000
오영은	30,000	30,000
오은주	20,000	20,000
오정수	20,000	20,000
오화수	20,000	20,000
우상호	30,000	30,000
유기수	10,000	10,000
유은숙	10,000	10,000
유원목	20,000	
윤경자	30,000	30,000
윤영소	10,000	10,000
이계환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이규호	30,000	30,000
이두엽		20,000
이두희	30,000	30,000
이상준	200,000	200,000
이상배	20,000	10,000
이영국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이영후	30,000	30,000
이용규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이원현	100,000	100,000
이윤옥	20,000	20,000
이응국	5,000	5,000
이인석	10,000	10,000
이일선	30,000	30,000
이재선	5,000	5,000
이정재	50,000	50,000
이종락	30,000	30,000
이종찬	100,000	100,000
이창복		20,000
이창중	20,000	20,000
이학노	20,000	20,000
이학호	10,000	40,000
이항중	30,000	30,000
이해준	20,000	20,000
이혜숙	10,000	10,000
이호현	20,000	20,000
임재경	10,000	10,000
임진택	5,000	5,000
장팔순	10,000	10,000
정홍(상주영로 발행)	20,000	
전창일	20,000	20,000
정동익	30,000	30,000
정만기	30,000	30,000
정범구	30,000	30,000
정재경	10,000	10,000
정지완	5,000	5,000
정철승		30,000
정현기	10,000	10,000

회원명	11월	12월
조기식		10,000
조명숙	10,000	10,000
조세현	20,000	20,000
조영빈	5,000	
조용준	30,000	30,000
조인형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조희환	10,000	10,000
주서영	30,000	30,000
추철기	30,000	30,000
최낙현	20,000	20,000
최문성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최병욱	10,000	10,000
최영진	10,000	10,000
최정식	10,000	10,000
함세웅	30,000	30,000
홍순권	10,000	10,000
황승일	10,000	10,000
홍승현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2011년 11월, 12월 기념관회비

회원명	11월	12월
차영조	30,000	30,000
최기창	10,000	10,000
유중하	10,000	10,000

2011년 11월, 12월 특별회비

회원명	11월	12월
(주)오 모티오	5,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2,000,000	2,000,000
김지동		500,000
민영백	100,000	
피델리메젠택서산권리주식회사	3,460,000	
대학내일	5,000,000	
김영범	100,000	
전영복	50,000	50,000
홍소연	50,000	
이우재		100,000
김갑제		50,000
최명환	50,000	
이만열		50,000

2011년 10월 미납회비

회원명	10월	
김성근	20,000	
김희선	10,000	
류동연	5,000	
박녹삼	10,000	
이정재	50,000	
조기식	10,000	
천정배	10,000	

◆ 입회원서 ◆

이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의립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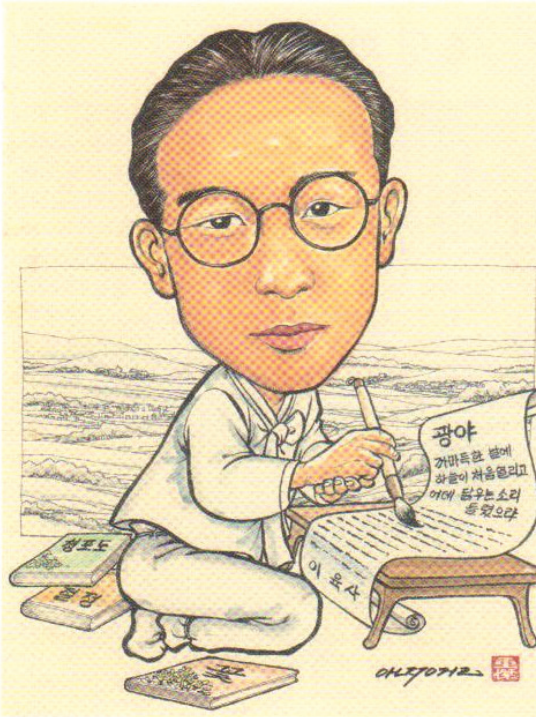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4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광야의 지사와 해바라기 시인

항일



이육사 (1904~1944)



본명은 이원록, 육사는 그의 호다. 1925년 중국으로 건너가 의열단에 가입하였고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파사건에 관여되어 3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때의 수인번호 64번을 따서 호를 '육사'라고 지었다.

출옥 후 중국 북경대학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1933년 귀국하여 <항훈>을 발표하여 문단에 나왔고 1937년 윤근강, 김광균 등과 함께 동인지 <자오선>을 발간하고 <청포도><절정><광야> 등 우리 민족의 웅혼한 기상과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시들을 발표했다.

1943년 6월 국내에서 지하항일운동을 벌이던 중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이듬해 북경감옥에서 옥사했다.

서정주 (1915~2000)



창씨명: 타츠시로 시즈오(達城正雄)

1936년 등단 직후 <시인부락>을 창간하고 주필을 맡았으며 1941년 <화사집>을 출간했다. 1942년 평론 <시의 이야기-주로 국민시가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다수의 친일작품을 쓰기 시작했고 친일문학지 <국민문학>과 <국민시가>를 편집했다. <항공일에>와 <오장 마쓰이 송가>는 전쟁터에 나가 일본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선포하는 대표적인 친일시다.

이 외에도 <징병 적령기의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스무살 된 벗에게> <헌시-반도학도 특별지원병 제군에게> 등의 친일시와 소설 <최체부의 군속지원> 등 수많은 친일작품을 남겼다.

해방 후에는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등 온갖 감투를 썼으며 대한민국예술원상, 5.16문학상, 자유문학상, 금관문화훈장 등 셀 수 없이 많은 상을 받는 등 양지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던 자칭 종천순일파(從天順日派)이다.



친일

100年 편지



편지를 보내주세요

‘100년 편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1919.4.13)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2019)을 맞아 쓰는 편지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과 인간형을 넘나드는,

역사와 상상이 조우하고 회통하는,

100년 편지는 편지이자 편지로 쓰는 칼럼입니다.

내가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쓰거나,

내가 김구 선생이 되어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 13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한통씩 메일로 발송되는

100년 편지는 현재 약 3,500명 정도 받아보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수신인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전국민이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발송되는 100년 편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속 인물에게 편지(원고지 5매~7매 분량)를 보내 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100년 편지를 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로 연락주세요.

www.korea100.org

보내주실 곳 : 100-101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76-3 오양수산빌딩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E-mail : kpg1919@korea.com

minkook100@naver.com

*채택되신 분께는 감사한 마음으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